

전략연구 2015-18

충남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여형범 · 이강준 · 조보영

발 간 사

충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아직 제대로 걸음을 떼지 못한 상태이지만, 국내 다른 지자체들은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의 중앙정부는 지자체 ODA 사업의 난립을 걱정하면서 지자체 ODA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ODA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ODA가 활발했던 스페인에서조차 경제위기로 가용한 예산이 줄어들자 지자체 ODA 예산을 줄이거나 그 효과를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은 여전히 OD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ODA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 ODA는 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공여국과 개발협력국이 함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를 검토한 후, 충남 ODA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 ODA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고 정리된 사례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며, 2016년부터 국내·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매우 제한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비추어볼 때, 미래 ODA는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서로에게 상생적이고 함께 책임을 지며,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보다 혁신적인 사업과 재원을 개발하도록 추동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남이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충남의 경제·사회·환경적 활동들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복잡하게 얽여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비록 시작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작은 기술과 자원을 보태는 정도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눈덩이처럼 굴러 지구적인 지속가능성을 불러올 것이라 기대하며, 이 연구가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6월 30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사업 차원에서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70개 사업을 약 150억원 예산규모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내 통합적 ODA 체계와 별개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심사·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관계부처합동, 2015). 충청남도 또한 ODA와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및 정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KOICA 글로벌연수 사업으로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단기간(3주)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아프리카 농업 개발’ 프로그램(2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충남농업기술원, 2014).

현재 지자체 ODA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적 전략 및 통합추진체계 하에 추진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지자체의 ODA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자체 ODA에 대한 상이한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ODA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ODA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크게 국내·외 ODA의 동향 검토,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 조사, 충남 ODA 추진 여건 분석을 통해 충남 ODA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 내용

1)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ODA 동향에서는 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하는 국내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필요, ② 지자체 ODA에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 필요,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자체 ODA 추진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국내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③ 지역과 국내의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④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넘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국외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 고양,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등 네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1]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	국외
① 유엔 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한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진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②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 반영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ODA 추진	④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2) 충남의 ODA 추진 방향

이 연구에서는 충남 ODA의 추진 방향을 ① 국내·외 ODA 동향을 반영한 충남 ODA 기본 원칙 정립, ②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③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축, ④ 충남 ODA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⑤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에서는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남 내 해석·적용,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를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 인도적 지원 및 협력대상국의 빈곤과 사회문제 해결 -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충남의 인지도 상승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남 내 해석·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검토 -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연계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지방화된 규모의 대안적 ODA 사업 추진 - 충남의 내발적 지역발전 담론 반영 - 도정철학인 '행복' 을 키워드로 한 ODA 원칙 구상

둘째,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충남 ODA 재원 확보를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3]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제교류·협력 조례에 ODA 지원 규정 추가 - 또는 ODA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사례)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ODA의 비전과 전략 - 충남 ODA 추진체계 - 연차별 ODA 사업
	충남 ODA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기금(가칭) 조성 - 외교부 및 코이카 ODA 사업 연계 - 지역기업들의 ODA 사회공헌활동 유도 - 국제기구 ODA 사업 연계

셋째,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에서는 단계적으로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4]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ODA를 추가 - 가령,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충남 적정기술에듀파크 사업 등에 관련 분야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또는 국제교류추진단 구성 시 ODA 분과 포함 - ODA 포럼, 충남 ODA 계획수립,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 수행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 코이카의 지역별 지자체-대학 연계 ODA 지원 센터 설립 사업 - 충남 내 ODA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대학과 충남ODA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	- 충남 자체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ODA 센터 설립 - 필요시 국제기구 및 국가의 지원

넷째,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충남 ODA 주체 발굴,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ODA 추진 NGO 지원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5]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충남 ODA 주체 발굴	- 충남 내 대학의 ODA 사업 현황 검토 - 충남 및 시·군의 ODA 사업 현황 검토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 충남내 대안적 지역발전 주체들의 ODA 사업 참여 지원 - 충남 인근 국책연구기관과의 ODA 사업 협력
	ODA 추진 NGO 지원	-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공모 지원 - NGO 대상 충남 ODA 공모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에서는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 선정, 중점협력분야 설정,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6]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 선정	- ODA 중점협력국 대상 충남 국제교류·협력 지자체 확대 - 중점협력국가와 협력지자체의 ODA 수요 조사 및 지역연구 수행
	중점협력분야 설정	- 기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ODA 사업화 - 기존 ODA 사업의 심화 - 충남 전략사업의 ODA 사업화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	-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 - ODA를 통한 대안 모색 및 국제협력 강화

3. 정책 제언: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지자체 가운데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OD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는 ODA 추진기반(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는 농업분야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ODA에 관심이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충남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충남도민 및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조례, ODA 전담 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국제교류·협력사업,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농업분야 ODA 사업,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환황해프로젝트,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등의 ODA 관련 사업들을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충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는 작업을 통해 충남 내 ODA 관련 사업들과 주체들을 발굴하고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공동된 번영을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총체적인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충남의 ODA 중점사업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존 농업·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충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가칭)’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인식 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 충청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분야	중점사업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존 농업·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국내·외 ODA 동향 및 시사점	11
1. ODA 일반 개요	11
2. 국제 ODA 동향	17
3. 국내 ODA 동향	23
4. 국내·외 ODA 동향의 시사점	28
제3장.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 조사	29
1. 국내 지자체 ODA 사례	29
2. 국외 지자체 ODA 사례	46
제4장. 충남의 ODA 추진 방향	66
1. 충남의 국제교류 및 ODA 현황	66
2. 충남 ODA 추진 방향	72
제5장.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80
1. 연구 요약	81
2. 정책 제언: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82

표 목 차

[표 1] 연구 내용 및 방법	9
[표 2]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13
[표 3] 우리나라 ODA 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 2003~2015년	13
[표 4] ODA 형태별 분류 (2015년 예산)	14
[표 5] 2015년 중점협력국 조정 결과(안)	15
[표 6]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국가	15
[표 7]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	16
[표 8] 중기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 공고화) 주요 추진과제	24
[표 9] 중기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 사업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24
[표 10] 중기정책방향(사업 추진역량 강화) 주요 추진과제	24
[표 11] 중기정책방향(국제활동 참여 강화) 주요 추진과제	25
[표 12] 중기정책방향(국내 추진기반 공고화) 주요 추진과제	25
[표 13] 지자체 ODA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표 14] 2010~2013 우리나라 ODA 사업 건수 및 금액 현황(약정액, 백만\$)	31
[표 15] 2010~2013 광역지자체의 ODA 사업 건수 및 금액(약정액, 백만\$)	32
[표 16] 2010~2013 지자체 ODA 사업수 및 금액	32
[표 17] 2010~2013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수 상위 10개 수원국	34
[표 18] 2010~2013 소득그룹별 ODA 내역	34
[표 19] 상위 사업분야별 지자체 ODA 현황	35
[표 20] 원조유형별 ODA 현황(2013년)	36
[표 21]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개요	37
[표 22]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개요	38
[표 23] 2010~2013 서울특별시 사업분야별 ODA 현황	40
[표 24] 2014년도 서울특별시 ODA 추진계획	41
[표 25]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개발협력 현황(2007~2013년)	43
[표 26]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훈련 추진 현황(2010~2013년)	43
[표 27] 유럽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형태	47
[표 28] 지방정부 ODA의 특성	48
[표 29] 2002-03년 OECD DAC 회원국의 지자체 ODA	49

[표 30]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도와 협력의 분산화 수준	50
[표 31]	2008년 스페인 ODA의 규모와 관리 유형	52
[표 32]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69
[표 33]	KOICA 민관협력사업 참여 충남 내 대학 현황	71
[표 34]	충남 ODA 추진 방안	72
[표 35]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74
[표 36]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75
[표 37]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76
[표 38]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77
[표 39]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78
[표 40]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80
[표 41]	충남 ODA의 추진방향	81
[표 42]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82
[표 4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88
[표 44]	210~2013 강원도 ODA 사업 세부 내역	90
[표 45]	2010~2013 경기도 ODA 사업 세부 내역	92
[표 46]	2010~2013 경상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94
[표 47]	2010~2013 경상북도 ODA 사업 세부 내역	96
[표 48]	2010~2013 대구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98
[표 49]	2010~2013 대전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99
[표 50]	2010~2013 부산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101
[표 51]	2010~2013 서울특별시 ODA 사업 세부 내역	103
[표 52]	2010~2013 울산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105
[표 53]	2010~2013 인천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106
[표 54]	2010~2013 전라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107
[표 55]	2010~2013 전라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108
[표 56]	2010~2013 충청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109
[표 57]	2010~2013 충청북도 ODA 사업 세부 내역	110

그림 목 차

<그림 1>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지역별 원조 지지율)	4
<그림 2> 개발학, 국제개발협력, ODA 비교	12
<그림 3> 우리나라의 26개 중점협력국	15
<그림 4> Post-2015 개발의제의 UN 논의 체계	19
<그림 5> 개발재원의 유형	21
<그림 6> OECD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추이	21
<그림 7> ODA 통계 측정 방식의 변화	22
<그림 8> 지자체 ODA 현황	30
<그림 9> 광역지자체별 ODA 현황(사업 수)	33
<그림 10> 광역지자체별 ODA 현황(약정액)	33
<그림 11> 서울시 ODA 추진체계	44
<그림 12> 2003-13년간 스페인의 ODA규모 및 GNI 대비 비율	51
<그림 13> 스페인 개발협력 평가를 위한 절차와 조직	53
<그림 14> 2014년 OECD DAC 회의국의 ODA규모와 GIN 비율	54
<그림 15> 2003-13년간 독일의 ODA규모 및 GNI 대비 비율	56
<그림 16> 충청남도 국제교류 현황	67
<그림 17>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구성도	68
<그림 1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강원	89
<그림 1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강원	89
<그림 2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기	91
<그림 2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기	91
<그림 22>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남	93
<그림 23>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남	93
<그림 2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북	94
<그림 2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북	95
<그림 26>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대구	97
<그림 27>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대구	97
<그림 2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대전	99
<그림 2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대전	99

<그림 3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부산	100
<그림 3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부산	100
<그림 32>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서울	102
<그림 33>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서울	102
<그림 3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울산	104
<그림 3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울산	104
<그림 36>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인천	105
<그림 37>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인천	106
<그림 3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전남	107
<그림 3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전남	107
<그림 4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제주	108
<그림 4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제주	108
<그림 42>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충남	109
<그림 43>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충남	109
<그림 4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충북	110
<그림 4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충북	11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개도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1987년에 300억원이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14년에는 2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과제로 삼고 있다(이소영, 2014).¹⁾

2010년 1월에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²⁾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ODA 사업의 주요한 시행기관이다.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지자체 국제교류 차원에서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70개 ODA 사업을 약 150억원 예산규모로 추진하였다. 이 중 경상북도(53억), 인천광역시(38억), 서울특별시(23억)의 사업 규모가 큰 편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하지만 지자체 ODA가 중앙정부 차원의 ODA 체계와 별개로 추진되어, 사업심사 및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업의 기획 및 발굴 과정이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지자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ODA 정책 및 전략 없이 홍보성·단기성 사업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또한 모든 지자체에서 국제협력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ODA 관련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평가다(관계부처합동, 2015). 충청남도 또한 ODA와 관련한 체계적인 제도 및 정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KOICA 글로벌연수 사업으로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부탄, 네팔,

1) 공적개발원조(ODA)는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증여 등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재원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티모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3주)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아프리카 농업 개발' 프로그램(2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충남농업기술원, 2014).

이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20차 회의(2015.1.9)에서는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안건(제20-3호)으로 다루었다. 지자체 ODA 사업현황에 대해 행정자치부로 보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중앙부처 ODA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절차'를 적용하고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이를 위해 'ODA 사업추진 매뉴얼'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ODA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때문에 충청남도가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와 관련된 제반 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 ODA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적 전략 및 통합추진체계 하에 추진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지자체의 ODA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자체 ODA에 대한 상이한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충남형 ODA'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보다는, ODA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ODA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 분석을 통해 ① 충청남도가 왜 ODA를 추진해야 하는지, ② 충청남도가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③ 충남의 ODA 추진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 ④ 충남형 ODA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ODA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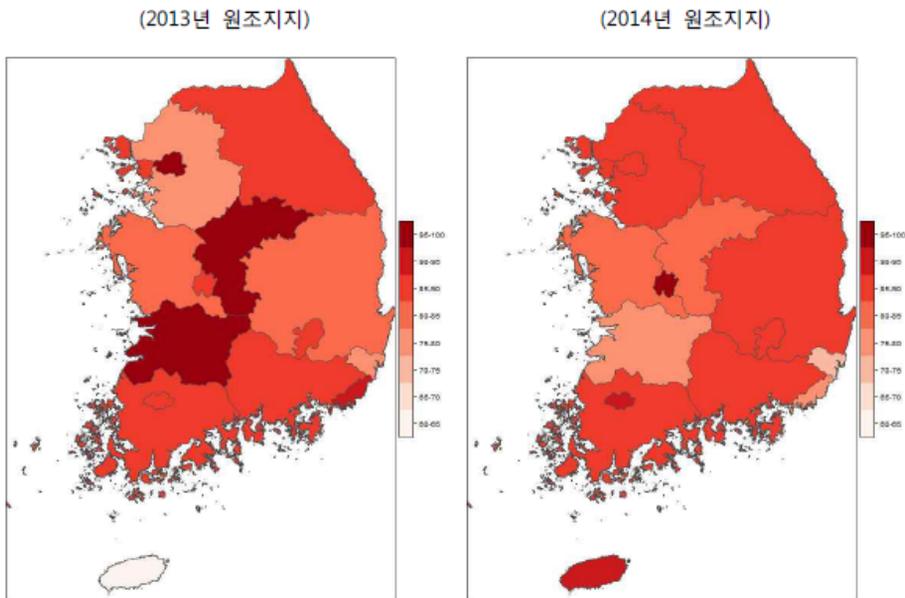
국가 수준의 ODA 추진에 대한 연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 ODA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국무조정실, 2014), 지자체 ODA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다루는 연구(이소영, 2014; 박광동 외, 2014), 특정 시·도의 ODA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박찬용, 2012; 김태경 외, 2014; 서울특별시, 2013), 지자체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채진원 외, 2014; 서울특별시, 2013)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서 국내 선행연구로 소개하지는 않지만 국내 일부 지방발전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자체의 ODA 추진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대구광역시의 지자체 ODA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무조정실, 경희대 산학협력단, 2014)

국무조정실은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대외원조의 중요성과 동기, 대외원조 지지도 및 정책선호도, 대외원조 기여도 및 효과 평가,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 접근성, 정부정책 개선과제를 물었다. 조사 결과 대외원조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86.5%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며, 원조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1%인 반면, 정부의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응답자는 35.9%에 그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37.3%에 머물고 있었다. 대외원조 제공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과거 수원혜택(37.9%), 저개발국 빈곤해결(29.0%), 국가 이미지개선(12.6%), 국제평화기여(10.8%), 기업진출지원(9.7%) 순으로 응답했으며, 대외원조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우리가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아서’ (48.9%), ‘국내 문제 해결 우선’ (31.1%),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14.1%), ‘저개발국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5.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무조정실(2014)의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인식조사는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해 시·도별 응답 특성도 제시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시·도별 응답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결과를 충남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적으로 ODA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이며 여전히 국민들이 ODA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문결과를 볼 때, 충남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민들에게 어떻게 ODA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지역별 원조 지지율)



자료: 국무조정실, 경희대 산학협력단, 2014, 13쪽.

(2)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이소영, 2014)

이소영(2014)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 가입 이후 공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ODA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

법에서도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ODA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방향으로 ① 글로벌 ODA 가이드라인 및 국가 ODA 정책방향 기초유지, ② 한국의 ODA정책의 분절화 경향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건요 ③ 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ODA 전문성 배양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추진방안을 ODA 사업 추진기반 확립(ODA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ODA 포럼 개최 등 홍보 강화, 지자체 공동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ODA 사업 추진경험 축적(해당 지역의 중점사업분야 선정, 다양한 유형의 ODA 사업참여), 국가의 ODA 사업추진 지원체계 확립(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유·무상원조기관과 연계 강화, 지자체 ODA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외, 2014)

박광동 외(2014)는 지자체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ODA가 중요한데 현재 지자체 ODA는 통합추진체계가 부재하여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 ODA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시·도 ODA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지자체 ODA의 추진체계 현황(조례, 재원, 평가체계 등)을 정리하고, 선진공여국으로서 독일과 일본의 지자체 ODA 사례와 협력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설정, 지자체 ODA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ODA 사업의 주요 안건 논의와 조정 주체 명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현 체계 유지안)과 무상원조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지자체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4) 경북 새마을운동 ODA 사업화 방안 (박찬용, 2012)

박찬용(2012)은 기존 ODA 방식이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새마을운동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공식적인 ODA 프로젝트로 만들 필요성을 제안한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핵심인 의식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ODA 사업 외에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도 제안하고 있다.

(5) 해외개발협력사업의 경기도 참여방안 연구 (김태경 외, 2014)

최근 지자체 ODA 예산의 압박으로 인해 인도적 차원의 ODA뿐만 아니라 경제적 ODA에 대한 관심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포함한 개발재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경 외(2014)는 서울특별시(2013)과 비슷하게 침체된 경기도 내 도시개발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해외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모델을 도입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개발사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개발협력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태경 외(2014)는 개도국 개발시장 구조 분석, 정부 및 타 시도, 기관들의 해외개발협력사례 벤치마킹, 경기도가 해외개발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강점 및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지자체 ODA의 필요성을 지자체 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ODA 추진을 정당화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ODA의 일반적인 규범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2014)의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ODA를 찬성하는 이유에서 기업진출지원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6)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수탁을 받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서울연구원은 민간의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비 ODA형 사업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ODA형 사업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ODA형 사업의 목적을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서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비ODA형 사업이 주로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ODA형 사업은 OECD DAC 기준 저·중소득국가(GNI 3,975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ODA형 사업을 위해 서울시 자체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달 사업이나 국제개발 관련 기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7)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

채진원 외(2014)는 지자체 ODA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서해안 시대를 맞아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채진원 외(2014)는 중앙정부가 국가 단위의 이념이나 논리에 충실한 반면 지자체는 보편적 가치와 실사구시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협력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채진원 외(2014)는 충남도 차원의 국제교류 협력이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통상 중심 프레임을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제교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진원 외(2014)는 서해안 시대 충남 국제교류의 아젠다로, 황해 환경협력 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충남의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교류 협력, 충남의 3농혁신과 분권·자치행정모델의 교류 협력, 지역에너지 체제의 수립과 녹색성장기반 교류 협력, 동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와 시민교육을 활성화 위한 지원 협력, 충남의 글로벌 다문화정책 모델 교류협력, 북한 특정 지역의 차터시티(Charter City)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창출과 연대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 추진 전략위원회’와 ‘국제교류추진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채진원 외(2014)가 제시한 사업이나 추진체계는 ODA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충남도 ODA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외(2004)의 연구에서 주요 대상국가로 보는 중국의 경우 국내 ODA의 중점추진국가가 아니지만, 국내 ODA의 주요 대상국인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지방도시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허브로서 충남의 기능을 비전 제안에 포함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소영(2014)과 박광동 외(2014)의 연구는 국내 지자체 ODA의 현황 및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분절화 및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국가 수준에서 지자체 ODA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하고 있어,

지자체 수준에서 ODA의 필요성이나 전망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 수준에서의 ODA 논의들을 좀 더 검토할 것이다. 박광동 외(2014)도 독일과 일본의 지자체 ODA 현황 및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일본 외에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국가 전체의 ODA 중 지자체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어서 지자체 ODA의 중요도가 큰 국가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일본 지자체 ODA의 일반 현황과 추진체계 외에 시가현, 기타큐슈시,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함께 소개할 것이다.

박찬용(2012), 김태경 외(2014), 서울특별시(2013)의 연구는 각각 경상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ODA 추진방안을 검토·제안하고 있다. 박찬용(2012)은 새마을운동을 경상북도 및 국가 ODA 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김태경 외(2014)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2013)는 서울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4개 분야(상수도, 도시철도, 교통정보시스템,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방안을 ODA와 비ODA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김태경 외(2014)는 경기도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민선 4·5기의 정책동향 및 최근 10년간 경기연구원의 연구(도시, 교통, 환경, 사회, 경제·문화 분야)를 경기도만의 고유성, 우수성, 정책부합성 등으로 평가하여, 강점을 지닌 주요 연구 분야(국토·지역개발, 신도시, 주택정보, 첨단교통, 대중교통, 도로·철도, 환경관리, 조직·경영, 재정·운영, 지역산업)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충남이 강점을 갖는 사업(분야)을 전제하고 이를 ODA 사업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ODA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박찬용(2012)이나 서울특별시(2013)의 연구보다는 김태경 외(2014)의 연구에 가깝다. 다만 김태경 외(2014)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도 ODA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유상원조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ODA 경험이 부족한 충청남도의 여건이나 국내·외 지자체 ODA의 현황을 고려하여 무상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ODA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채진원 외(2014)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제시한 분야를 포함하여 현재 충청남도의 특성이나 전략사업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 검토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크게 국내·외 ODA의 동향 검토, 충남 ODA 추진 여건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충남의 ODA 추진방향 제시의 세 부분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국내·외 ODA 동향 검토	ODA 일반 개요	문헌연구
	국제 ODA 동향	문헌연구, 워크숍
	국내 ODA 동향	문헌연구, 워크숍
지자체 ODA 사례 조사	국내 지자체 ODA 사례와 시사점	문헌연구
	국의 지자체 ODA 사례와 시사점	문헌연구
충남의 ODA 추진방향 제시	충남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문헌연구
	충남의 ODA 현황	문헌연구
	충남 ODA 추진방향	-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

국내·외 ODA 동향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으로 나누어 최근까지의 추세 및 담론 변화를 정리한다. 국제적 수준의 동향은 post-2015 개발의제(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 대안적 개발재원 논의, 원조효과성/개발효과성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내적 수준의 동향은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중점협력국 재선정, 2차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등),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의 의견을 살펴본다.

지자체 ODA 사례조사는 크게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로 구분한다. 먼저, 국내 사례를 시·도 단위에서 ODA 사업 수, 사업 예산,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충남의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강원도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국외 사례는 먼저 지자체 ODA가 비교적 활발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지자체 ODA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충남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스페인, 독일, 일본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ODA 동향과 국내·외 사례 조사, 충남의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충남의 ODA 추진방향을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충남 ODA 추진 기

반 조성,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강화,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 ODA 추진 방향에 대한 큰 틀과 충남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ODA 사업을 간략하게 제안하는데 그친다. 충남 ODA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연구 과제를 통해 더 자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국내·외 ODA 동향 및 시사점

1. ODA 일반 개요

1) ODA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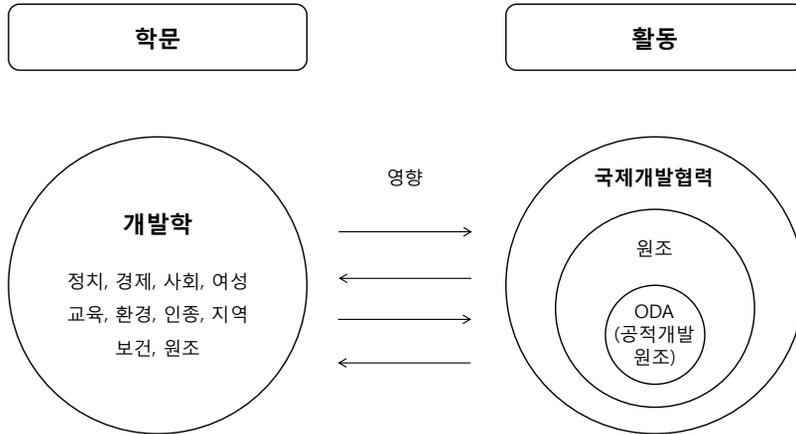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며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하고 있는 천부적 인권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줄여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고 한다(KOICA ODA교육원, 2013: 98).

국제개발협력 중에서도 공여국이 수원국에 기술 협력, 물적 자금 등 각종 형태로 지원하는 활동을 원조 혹은 개발원조라고 한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원조 중에서도 OECD의 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개발원조 활동을 지칭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4).³⁾

한편, 개발자원(Resources for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원으로서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한다(KOICA ODA교육원, 2013: 99). 먼저, 재원으로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을 말한다. 다음으로, 기타공적자금은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제공 자금 중에서 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으로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해당된다. 셋째, 민간자본의 흐름은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제공 자금으로서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 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증여는 NGOs가 개발도상국에게 증여하는 자금이다(KOICA ODA교육원, 2013: 100).

3) ODA에 대한 정의는 OECD DAC에 의해 1969년에 도입되었다. OECD DAC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수원국(recipient country)의 경제발전,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적 공여로서 DAC에서 규정한 조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적기관이 OECD DAC에서 지정한 수원국에 최소 25% 이상을 증여)을 충족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림 2> 개발학, 국제개발협력, ODA 비교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4

2) 국내 ODA 추진체계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1987년에 시작되었다. 1987년에 당시 재무부가 300억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유상원조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을 위탁하였으며, 1991년 당시 외무부 산하에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하현선, 2014).

현재 우리나라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총괄·조정 기관, 주관 기관, 시행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한다. 이 외에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현선, 2014).

[표 2]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구분		총괄·조정	주관기관(시행기관)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의무 有)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 (상환의무 無)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40여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20여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 국무조정실, 2014, 하현선, 2014

1987년 300억원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ODA 사업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ODA 사업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순지출 기준으로 2003년에 4,357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조 9,086억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다. 유상사업 규모는 1,187억원에서 5,457억원으로 4.6배 증가하였고, 무상사업 규모도 1,732억원에서 8,760억원으로 5.1배 증가하였다. GNI 대비 ODA 순지출 규모는 2003년 0.06%에서 2013년 0.13%로 2.2배 증가하였다(하현선, 2014).

[표 3] 우리나라 ODA 사업 실적 및 예산 추이 : 2003~2015년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ODA	7,705	4,333	6,470	8,907	10,396	13,562	14,667	17,986	19,086	22,583
ODA/GNI	0.1	0.05	0.07	0.09	0.1	0.12	0.12	0.14	0.13	0.16
○ 양자 (비율)	4,745 (100)	3,578 (100)	4,559 (100)	5,986 (100)	7,403 (100)	10,406 (100)	10,958 (100)	13,321 (100)	14,217 (100)	15,951 (100)
- 유상 (비율)	1,488 (31.4)	1,115 (31.1)	1,229 (26.9)	1,893 (31.6)	2,728 (36.8)	3,775 (36.3)	4,591 (41.9)	5,272 (39.6)	5,457 (38.4)	7,533 (47.2)
- 무상 (비율)	3,257 (68.6)	2,465 (68.9)	3,331 (73.1)	4,093 (68.4)	4,675 (63.2)	6,631 (63.7)	6,367 (58.1)	8,049 (60.4)	8,760 (61.6)	8,418 (52.8)
○ 다자 (비율)	2,960	754	1,911	2,921	2,993	3,156	3,709	4,665	4,869	6,632

- 주 : 1. 2013년까지는 순지출 기준이며 2014년은 예산기준임.
 2. 2012년까지는 확정금액이나 2013년은 잠정치임.
 3. 양자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분류됨.
 4. 동 자료는 2014년 10월 말 기준 공식통계임.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 2014; 하현선, 2014에서 재인용.

ODA 사업 형태로는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PPP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프로젝트 원조가 절반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ODA 형태별 분류 (2015년 예산)

(단위: 억원)

계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PPP 지원
			소계	개발 컨설팅	초청 연수	장학생 초청	봉사단 파견	기타기술협력	기타			
20,732	10,976	466	3,817	1,110	580	519	1,174	430	2	403	12	407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주관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 중기지원전략 등의 내용을 담는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ODA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하현선, 2014).

한국은 2010년 이전까지는 유·무상 원조기관이 지원국가별로 ODA 전략을 수립했으나, 2011년부터는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협력대상국별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다. 2013년에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수립 완료되었다. CPS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수립되기 때문에 협력대상국별로 맞춤형 ODA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중점협력국은 3~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될 수 있다(김태경 외, 2014). 현재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협력국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2년 한국이 강점을 지니는 한국형 ODA 모델을 의결하고, 재원규모 제약을 감안하여 기본 프로그램 40개를 선정한 바 있다. 물론 ODA 사업의 범위가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한국형 ODA 모델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 재해 예방과 회복력 증진, 도시와 농촌의 연계, 포괄적 경제성장, 국가 내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 생물다양성 증진, 해양자원의 보존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확정되면 이에 맞추어 한국형 ODA 모델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7] 한국형 ODA 기본 프로그램

구분	기본 프로그램	
경제 (15개)	경제정책	경제개발5개년계획,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산업에너지	산업개발 정책자문, 전력인프라 구축
	국토개발	국토간선교통망 확충,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농어업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종합개발,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회 (13개)	보건복지	모자보건 사업,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
	교육	초등교육 보편화, 중등교육체계 구축, 고등교육체계 구축, 교원역량 강화
	인적자원	기능인력 양성, 고용지원·관리, 숙련기술 장려·형성,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 행정체계 구축, KIST 설립, 적정과학기술 지원
거버넌스 (2개)	행정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새마을운동 운영
미래·범분야 (10개)	녹색·환경	안전한 식수공급, 하수처리·관리체계 구축, 물환경 보전
	ICT	국가기간망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 인력양성,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ICT R&D 체계 구축
	여성	모자기정 지원, 여성 직업훈련

자료: 이소영, 김현호, 2014, 36쪽.

2. 국제 ODA 동향

1) 새천년개발목표(MDGs) 평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수립 과정과 평가

2000년 유엔천년총회에 참가한 정상급 수석대표들은 빈곤, 질병, 환경과피 등과 같은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기간 및 이행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의 “Roadmap”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 관련 8개 과제를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이름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통합적인 노력을 결의하였다(환경부, 2013).

MDGs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장 속에서 빈곤문제가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1990년대 전세계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원조액이 감소하는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MDGs는 인류 공동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실천 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처음 발표된 이후 유엔의 국제개발이 지향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자리 잡았다(환경부, 2013).

하지만, MDGs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김현주, 남상은, 2014). MDGs는 수립 과정에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고위 관료 및 전문가 그룹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수립되었기에 국가별 시민단체 및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유엔은 2001년 제59차 유엔총회에서 MDGs의 8개 목표를 담은 사무총장의 로드맵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2000년 채택된 ‘새천년 정상선언’에 비해 평화, 안보, 군비 감축 및 인권 내용이 축소되었고, 빈곤의 국가별 정치·사회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MDGs의 목표와 세부목표가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MDGs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도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MDGs는 ‘발전’을 분야별로 분리된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부문을 연관된 체계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를 방해했으며, ‘발전’을 빈곤 감소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김현주, 남상은, 2014). 또한 MDGs 상에서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로 틀 지움에 따라 부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보다는 가난한 국가의 빈곤 문제만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령, 아시아의 절대빈곤층 감소 뒤에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숨겨져 있지만, MDGs 목표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불공정한 무역과 금융, 환경비용 전가, 자원 수탈과 같은 전세계가 함께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김현주, 남상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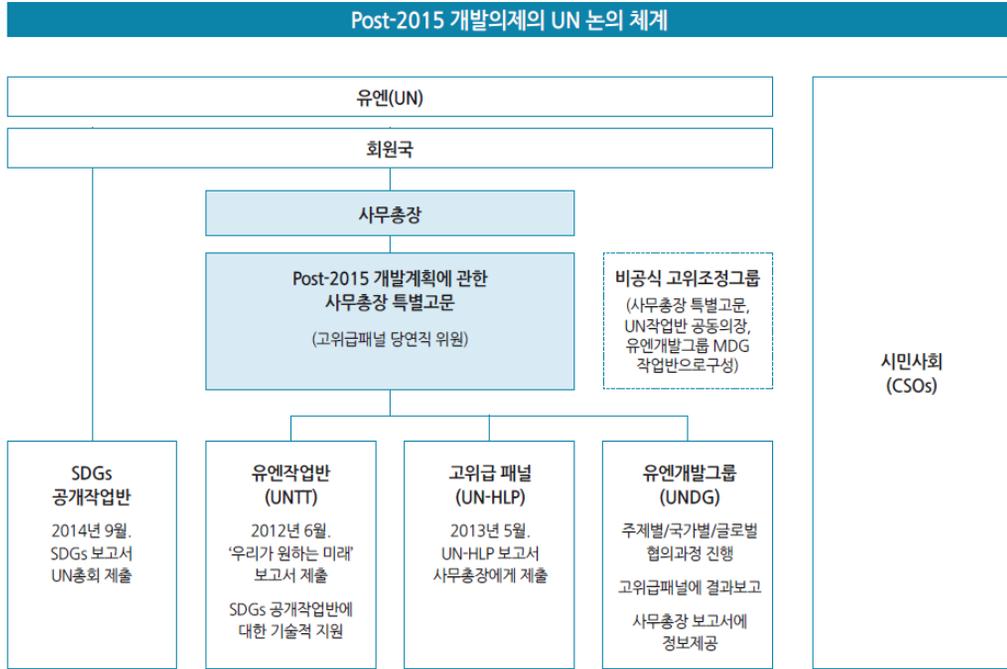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새천년선언이 합의되던 2000년에 비교해 현재 국제개발협력의 여건은 많이 바뀌었다. 먼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재정규제, 세금 회피, 불안전 등 많은 과제들은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Higgins, 2013). 둘째로, 민간부문, 자선재단, 시민운동 등 정부 외의 이해당사자들이 지구적 사건들에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 개발재원과 관련해서도 원조는 많은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에게 중요한 자원이지만, 세금, 송금액, 투자 등 다른 개발 자원 원천들이 2000년에 비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2015년에 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에 관한 논의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유엔사무총장 하의 일련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post-2015 개발의제가 작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UN 회원국/공개작업반에 의해서 새천년개발목표가 작성되었다(강선주, 2014). 2014년 7월 리우+20회의에서 Post-2015 개발의제의 내용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초안을 제안한 상태이며, 2015년 초부터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 평화,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17개 목표의 초안에서는 절대빈곤의 퇴치, 영유아사망률 완화, 산모사망률 완화, HIV/AIDS, 말라리아 등의 질병의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산과 같이 가장 시급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한계를 넘어 국내외의 불평등 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 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곳에서의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농업',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모든 곳에서의 성평등,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국내, 국가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

<그림 4> Post-2015 개발의제의 UN 논의 체계



자료: 강선주, 2014

2014년 12월에 유엔사무총장이 기 제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내용을 종합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유엔사무총장은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을 위한 6가지 필수요소(Essential Elements) 제안하였다.

- ① 존엄(Dignity) :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
- ② 사람(People) :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아동 포용
- ③ 번영(Prosperity) :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성장
- ④ 환경(Planet) :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
- ⑤ 정의(Justice)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강력한 제도 추구
- ⑥ 파트너십(Partnership)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 최종안은 2015년 8월에 ‘변화하는 세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산’ 등 개발도상국에서만 아니라 현 한국사회에서도 지향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문도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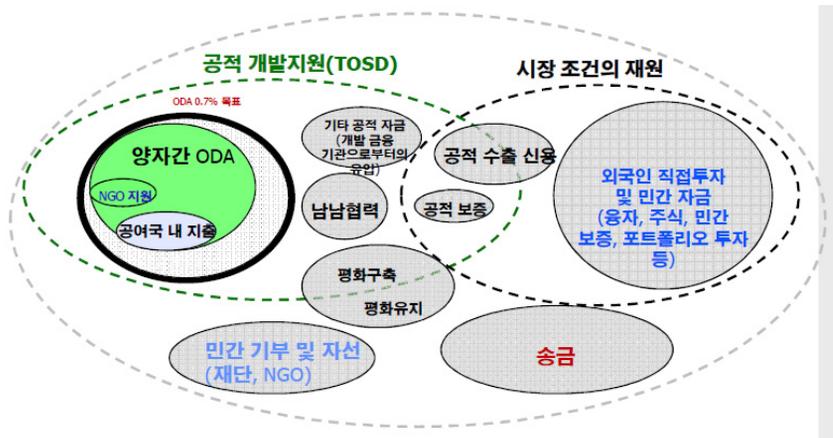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서문에서 2014년 12월의 종합보고서의 6가지 필수요소는 인간(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대 핵심요소로 수정되었다.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되었다(부록 참조).

2) 대안적 개발재원 논의

UN 새천년개발목표가 2001년에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제1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개최하고,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을 채택하였다. 2008년에는 제2차 개발재원총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어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이 합의되었다. 도하회의에서는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을 위한 추가 비용, 국제원자재 시장의 가변성, 전후 국가 재건 및 개발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조되었다(임소진, 2015). 최근에는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DA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발재원과 이를 집행할 개발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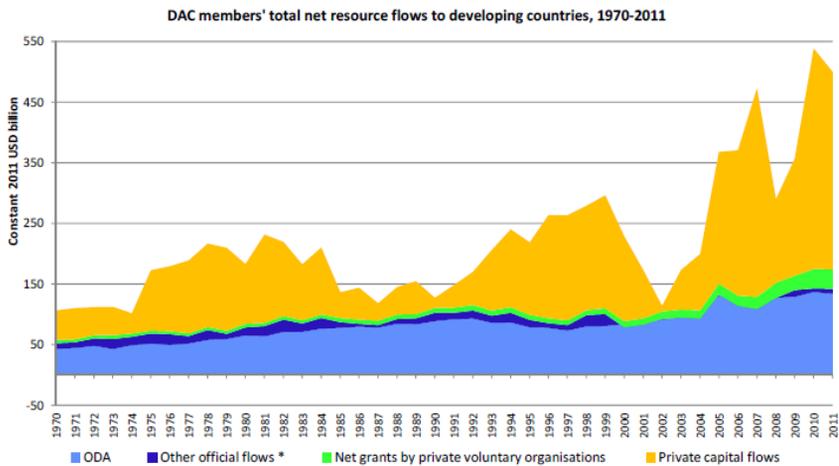
이미 기존 OECD DAC 회원국 외에 신흥원조공여국(중국 등)이 등장하여 독자적인 원칙 하에 원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 사이의 개발협력(남-남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개발협력 분야로 투입되는 민간자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기준으로 민간개발자본이 ODA 총량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김태균 외,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기제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11년 부산원조총회의 결과물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도 민간부문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되고 있다(김태균 외, 2015). 이러한 변화는 ODA에 대한 기존 개념 및 ODA와 다른 개발재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김태균 외, 2015). 반면, 민간부문의 영향력 확대가 ODA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오히려 국제개발협력의 공적영역을 사유화하는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재원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태균 외, 2015).

<그림 5> 개발재원의 유형



자료: 권을, 2015.

<그림 6> OECD DAC 회원국의 개발자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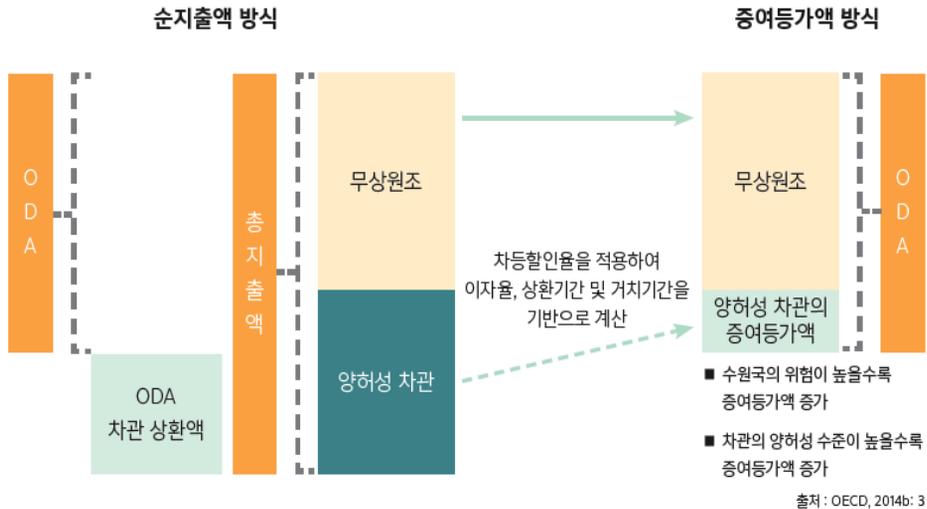


자료: 권을, 2015.

모든 OECD DAC 회원국들은 OECD 통계시스템(CRS)을 이용하여 각 공여국의 원조 지원 현황을 매 년 보고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은 개발원조의 형태를 ODA, OOF(Other Official Flows), PF(Private Capital Flows)로 구분하여 보고하는데, 이런 구분과 계량화는 OECD DAC이 제공하는 ODA 정의에 기초한다. OECD DAC의 ODA 정의는 196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1972년에 수정되었으며, 2014년 12월에 다시 수정되었다.

2014년에 재정의된 ODA 개념에 따르면, 무상원조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양허성 차관의 경우 개도국의 소득그룹별로 ODA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중소득국에 대해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임소진, 2015).

<그림 7> ODA 통계 측정 방식의 변화



자료: 구윤정, 2015.

3) 개발효과성 논의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및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② 수원국 개발전략 및 체제와의 일치(Alignment), ③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④ 성과 중심의 원조(Managing for Results), ⑤ 상호책임성 추구(Mutual Accountability) 등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입각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채택된 '아크라행동계획'은 '파리선언'을 보완하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방안으로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② 포괄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 ③ 성과 중심의

원조(Delivering Results)를 강조하였다(조한덕, 2013: 131-132).

최근에는 '원조'는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무수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제한적 의미의 '원조'에서 더욱 포괄적 개념인 '개발'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마지막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의였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원조효과성 원칙을 넘어 빈곤감소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손혁상, 2013: 182-183).

3. 국내 ODA 동향

1)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기 ODA 전략인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수립 절차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2015년 3월 중), 이에 따라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이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초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출하면(2015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을 종합 작성(2015년 8월)하고 확정(2015년 10월)하게 된다. 관계기관들은 '제2차 ODA 기본계획 T/F'를 통해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주관기관별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의 의견을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재외공관 및 협력대상국의 현장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양·다자, 유·무상별로 지역별, 분야별, 중점협력국별 구체적인 자원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는 중기 정책방향을 ODA 통합추진 공고화, ODA 사업 선진화, 사업 추진역량 강화, 국제활동 참여 강화, 추진기반 공고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중기 정책방향 별 세부내용(안)은 다음과 같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 공고화'에서는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운영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지자체 ODA 사업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무상기관간 사업 분절화 개선 측면에서 추진 절차 및 평가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표 8] 중기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 통합추진 공고화)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용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별협력전략 수립, 유·무상사업간 연계 등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다자원조 추진전략, 중점분야 및 기구 선정, 다자원조 평가방안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운영	사업조정과 예산편성과의 연계,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무상기관간 사업 분절화 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 선진화’에서는 사업발굴 및 선정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ODA 품질 제고, 사업 투명성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다. 지자체 ODA 사업도 수원국과의 협의, 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사업의 사후관리 등의 정책방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표 9] 중기정책방향(국제개발협력 사업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용
사업발굴 및 선정 개선	수원국 협의절차 개선, 현지협의체 활동 강화, 국민제안형 ODA 사업 등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 사업형태별(DSP,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등) 효과성 제고방안 등
ODA 품질 제고	비구속성 원조 확대, PBA 방식 확대, 대규모 사업 추진, 조달시스템 선진화, 범분야 safeguard 등
사업 투명성 제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사업 추진역량 강화’에서는 ODA 평가 기간 강화, 원조 집행기관 역량 강화,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된다. 지자체 ODA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우처럼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표 10] 중기정책방향(사업 추진역량 강화)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용
ODA 평가 기반 강화	성과관리 강화, 모니터링 강화, 평가기관 설치 검토 등
원조 집행기관 역량 강화	KOICA, EDCF의 인력확충 및 직원 전문성·역량 강화 등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ODA 인턴 확대, 분야별 전문가 양성, 봉사단 인력활용 등

‘국제활동 참여 강화’에서는 Post-205 출범에 따른 대응, 국제기구 참여 확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된다.

[표 11] 중기정책방향(국제활동 참여 강화)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용
Post-2015 출범에 따른 대응	Post-2015 후속조치 및 다양한 개발재원 활용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
국제기구 참여 확대	국제기구 인력진출 지원, 국제기구 발언권 강화 등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선진 공여국과 공동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MDB 협조 용자 확대, 공여국간 원조조화 등
인도적 지원 확대	

‘국내 추진기반 공고화’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국민 이해 증진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된다. 지자체의 경우 자체 ODA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민 이해 증진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 내 ODA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2] 중기정책방향(국내 추진기반 공고화)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용
민관협력 활성화	(시민사회) 민관협력사업 확대, 시민사회와 협력방안 등 (기업) PPP사업 확대, 컨설팅산업 육성, 국제 조달시장 참여 지원 등
국민 이해 증진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홍보예산 확대, 국제홍보 등 (교육) 개발교육, KOICA·EDCF의 교육 확대 등 (연구) 대학·연구기관과 협력방안 등

2)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 논의

지자체 ODA의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주로 국내 ODA 사업의 분절화로 인한 문제를 지자체 ODA가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한다. 한국 ODA 사업의 분절화 문제는 국내·외 해당기관과 학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분절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조정기능의 추가 혹은 강화로 이어져왔다.⁵⁾ 이러한 대응은 단일한 의사결정과 집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절화를 전제로 하면서”(이학교, 2011) 조정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분절화된 원조체계로 인해 원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2006년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10년부터 부처 간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한 시행기관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도시간 자매결연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해 오며 따라 ODA 사업의 심사 및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타 기관과 협업이 어려웠다고 진단한다.⁶⁾ 때문에 각 지자체의 ODA 사업이 국가적 전략과 연계되어 통합적 ODA 추진체계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⁷⁾ 개선방안에서는 중앙부처의 ODA 사업과 동일하게 지자체 사업도 2015년

-
- 5) 분절화(fragmentation)는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 활동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태주(2011)는 분절화된 원조의 문제점으로 ① 예산의 비효율성 초래, ② 통합 정책과 전략수립 저해, ③ 원조 행정비용 증가, ④ 원조효과성 감소, ⑤ 현장중심 원조 저해, ⑥ 파트너와의 원조 정책협의 저해, ⑦ 파트너 국가 행정비용 증가 초래, ⑧ 국제사회의 권고와 추세에 역행, ⑨ 원조 전문성과 지식축적 저해, ⑩ 국가 이미지 개선에 부정적 등을 지적한 바 있다.
- 6) 박광동 외(2014)는 우리나라 지자체 ODA의 한계로 지자체 ODA 사업의 영세성, ODA사업의 중복성 및 분절화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지자체 ODA는 양적 규모가 매우 적고, 사업 실적이나 추진체계에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차원의 ODA사업 관련 심사·조정시스템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ODA사업의 통합추진체계의 부재로 지방자치단체 간 ODA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ODA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지자체 ODA사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ODA사업의 중복성 및 분절화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7)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한 시행 기관이나, 그간 ODA 통합추진체계와 별개로 사업을 시행”해 왔고, “최근 지자체의 ODA 사업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자체 ODA 사업도 ODA 통합전략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지자체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통합적인 ODA 사업 심사·조정 체계에서 제외”돼 있어, “중복사업의 조정이나 기관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사업 연계 곤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지자체의 사업이 아시아 특정 국가에 집중되

부터 사업 1년전 중복·부실사업 조정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 현황관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 사업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아래 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 ODA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사업 현황관리, 사업 중복·분절화, 사업 효과성, 사업 추진역량 등 네 분야로 정리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표 13] 지자체 ODA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 현황관리	정부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자체 사업현황 요구 통계 부정확성 초래	행자부로 보고창구 일원화 행자부가 사업계획 취합 후 외교부에 제출
사업 중복·분절화	지자체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안함 중복사업 조정이나 연계 어려움	지자체 ODA 사업도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절차 적용 국무조정실에서 사업조정 결과 반영 여부 점검
사업 효과성	국가협력전략, 수원국 개발계획 고려 없이 홍보성 사업 위주로 발굴·추진	사업발굴 단계부터 수원국 수요 분석, 재외공관 협의, 국가협력전략 활용 지자체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사업 추진역량	전담부서 부재 및 순환보직으로 전문적 수행 어려움	ODA 사업추진 매뉴얼 제공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조정만으로 지자체 ODA의 중복·분절화 문제가 해소될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ODA 사업의 경우 국제교류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터 보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통계의 부정확성이나 사업의 중복·분절화 해소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는 협력대상국 내 지자체 수준의 정보를 원하는데, 국가협력 전략이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가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수준의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자체 수준의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 사업 중복수행 소지가 있다고 진단한다.

4. 국내·외 ODA 동향의 시사점

먼저, 국내·외 ODA 동향 중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post-2015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수립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개발재원 논의, 신기후체제 수립 논의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앞서 정리한 바대로, 새천년개발목표가 주로 저개발국 및 최빈국의 절대적 빈곤, 위생, 성 등 사회적 목표에 치중한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저개발국 및 최빈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 논의에서도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지역별로 처한 여건, 역량, 자원 등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적 맥락(local context)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시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원국 또는 협력대상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지자체나 지자체연합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UCLG, 2009). 반면, 국내 지자체 ODA는 개발효과성 증진보다는 지자체의 국제교류의 연장 또는 확대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국내 지자체 ODA는 협력대상국의 구체적인 수요보다는 국내 지자체의 특성화된 분야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주로 국내 연수 형태를 띠면서 국내의 선진 기술이나 경제개발 경험을 여러 협력대상국의 공무원에게 홍보하고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ODA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ODA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었다. 다만, 최근 국내 지자체도 서울시나 강원도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 및 지자체연합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효과성 논의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 수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대상국 내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 수준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개발이 야기하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에 대응할 역량과 경험을 지자체들은 지니고 있다. 비슷하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협력대상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보다 지방화된 틀을 통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 조사

1. 국내 지자체 ODA 사례

1) 국내 지자체 ODA 일반 현황

(1) 지자체 ODA의 제도적 기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자체도 분명 ODA의 주체 중의 하나로 명시했다.

실제로 OECD DAC 가입 이후, 한국의 ODA 관련 예산 및 사업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ODA는, 그동안 국내 ODA 관련 예산 및 사업에서 비중이 매우 적었으나, 지구지방화 시대에 지자체를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 방안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신종호, 2012; 박광동 외, 2014).

하지만, 중앙부처 및 기관과는 달리 지자체는 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법규 등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ODA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국제교류업무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조례의 목적은 각 지자체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광동 외, 2014). 하지만 이 조례들은 대부분 ODA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정도가 ODA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광동 외, 2014).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ODA 사업이 ODA 비전 및 전략 없이 부서별 결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타 부서 및 중앙정부 부처와의 정책협의를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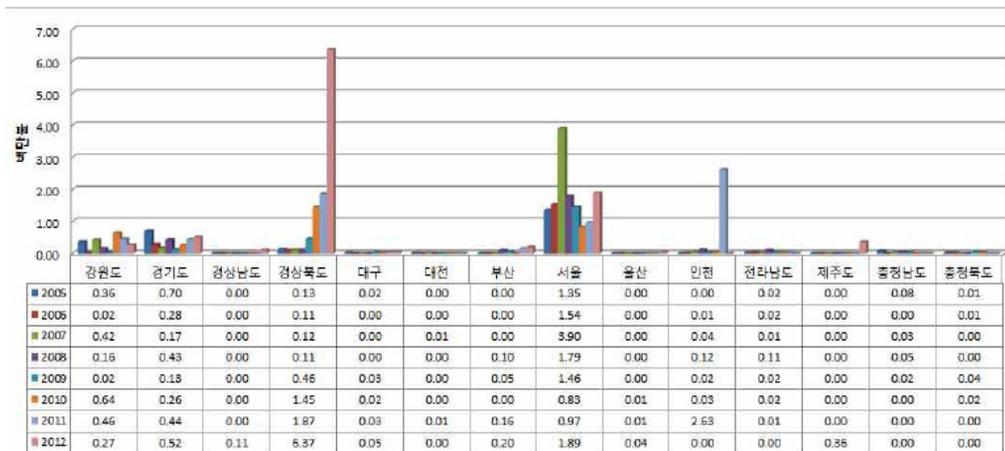
협력대상국의 ODA가 어떤 시스템 하에서 수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지자체 자체 평가나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으로만 수행되고 있다(박광동 외, 2014).

(2) 지자체 ODA의 재정 규모와 사업 수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ODA는 61개 기관, 91.16억\$, 29,780건이었다. 같은 기간 광역지자체 ODA는 14개 기관, 3,574만\$, 521건이었다. 지자체 ODA는 전체 ODA 대비 기관수의 23%, 금액의 0.4%, 사업수의 1.7%를 차지했다. 이러한 지자체 ODA는 그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 규모는 약정액 기준 2010년 33억 원에서 2013년 148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그림 8> 지자체 ODA 현황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김태경 외(2014)에서 재인용.

[표 14] 2010~2013 우리나라 ODA 사업 건수 및 금액 현황(약정액, 백만\$)

		2010		2011		2012		2013		합계	
전체	기관수	42		47		45		47		61	
	약정액(백만\$)	1,996.28		2,009.63		2,451.31		2,658.92		9,116.15	
	사업수	5,607		7,676		7,505		8,992		29,780	
지자체 (비중)	기관수	9	(21.4%)	11	(23.4%)	9	(20%)	13	(27.7%)	14	(23.0%)
	약정액(백만\$)	2.99	(0.1%)	6.43	(0.3%)	12.98	(0.5%)	13.34	(0.5%)	35.74	(0.4%)
	사업수	127	(2.3%)	99	(1.3%)	111	(1.5%)	184	(2.0%)	521	(1.7%)

자료: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다수의 지자체가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 수나 규모에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경상북도가 가장 활발히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개 광역지자체 ODA는 모두 237건, 2,306.7만 \$이었는데, 사업수는 서울시가 208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경상북도가 1,793.6만\$(77.8%)로 가장 많았다. 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지자체 전체 ODA 사업 수의 15%, 금액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청남도는 지자체 전체 ODA 사업 수의 5.8%, 금액의 0.6%로 지자체 중에서도 양적 측면에서 규모와 비중이 매우 낮다.⁸⁾

8) ODA 사업 건수 및 금액은 수출입은행에 제출된 ODA 현황으로 실제 ODA 현황과 차이가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2010년과 2012년의 ODA 사업은 생략되어 있으며, 사업수 또한 2013년 기준 29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2건과 차이가 크다.

[표 15] 2010~2013 광역지자체의 ODA 사업 건수 및 금액(약정액, 백만\$)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사업수	백만\$	사업수	백만\$	사업수	백만\$	사업수	백만\$	사업수	백만\$
경북	39	1.15	13	1.72	17	9.54	9	5.53	78	17.94
인천	12	0.03	2	2.63	-	-	4	3.51	18	6.16
서울	49	0.83	54	0.97	45	1.89	60	1.53	208	5.22
경기	10	0.26	9	0.44	11	0.52	12	0.79	42	2.01
강원	9	0.64	4	0.46	15	0.27	23	0.29	51	1.66
제주	-	-	-	-	2	0.36	2	0.51	4	0.87
부산	-	-	10	0.16	10	0.2	22	0.48	42	0.85
대구	2	0.02	2	0.03	4	0.05	5	0.24	13	0.34
경남	-	-	-	-	4	0.11	3	0.13	7	0.24
충남	-	-	1	0	-	-	29	0.2	30	0.21
울산	1	0.01	1	0.01	3	0.04	3	0.05	8	0.1
충북	1	0.02	-	-	-	-	10	0.05	11	0.07
대전	-	-	1	0.01	-	-	2	0.03	3	0.04
전남	4	0.02	2	0.01	-	-	-	-	6	0.04
합계	127	2.99	99	6.43	111	12.98	184	13.34	521	3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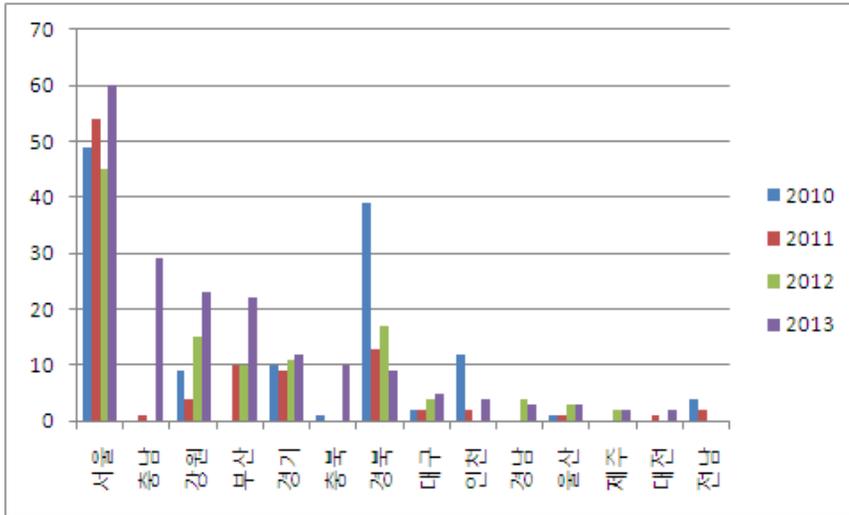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표 16] 2010~2013 지자체 ODA 사업수 및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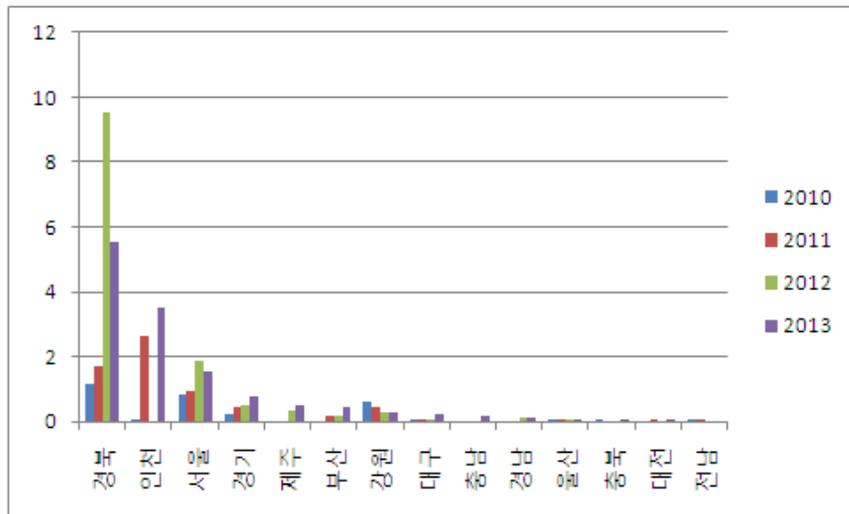
	사업수	비중	금액(만\$)	비중		사업수	비중	금액(만\$)	비중
	강원	51	21.5	166.3		7.2	서울	208	87.8
경기	42	17.7	200.8	8.7	울산	8	3.4	10.5	0.5
경남	7	3.0	23.8	1.0	인천	18	7.6	616.1	26.7
경북	78	32.9	1,793.6	77.8	전남	6	2.5	3.7	0.2
대구	14	5.9	33.8	1.5	제주	4	1.7	87.1	3.8
대전	3	1.3	3.8	0.2	충남	30	12.7	20.8	0.9
부산	42	17.7	84.6	3.7	충북	11	4.6	6.8	0.3
					합계	237	100.0	2,306.7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그림 9> 광역지자체별 ODA 현황(사업 수)



<그림 10> 광역지자체별 ODA 현황(약정액)



자료 : 수출입은행 국제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지자체의 ODA 예산은 주로 국제협력(진흥)기금이나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공동채원 마련보다는 자체채원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출연

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일부 지자체들은 외교부 및 KOICA와 협력하여 무상원조를 위한 공동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UN-HABITAT의 기금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박광동 외, 2014).

(3) 지자체 ODA의 주요 사업분야

국내 지자체 ODA 사업의 협력국가는 ‘사업수 상위 10개 수원국’에서 드러나듯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이 두드러졌다. 반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ODA 사업에 비해 비중이 적었다.

[표 17] 2010~2013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수 상위 10개 수원국

수원국	사업수	약정액(만\$)	수원국	사업수	약정액(백만\$)
몽골	83	385.9	필리핀	60	521.1
베트남	78	485.4	태국	46	114.9
캄보디아	73	550.7	라오스	43	436.4
중국	72	206.2	방글라데시	35	7,436.0
인도네시아	67	415.8	미얀마	33	181.5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표 18] 2010~2013 소득그룹별 ODA 내역

	지자체				전체			
	사업수	%	금액(백만\$)	%	사업수	%	금액(백만\$)	%
상위중소득국	141	27.1	2.404646	6.7	4453	15.0	598.977575	6.6
소득 미배분	35	6.7	20.147348	56.4	1090	3.7	2281.71654	25.0
저소득국	13	2.5	0.294771	0.8	620	2.1	35.300708	0.4
최빈개도국	147	28.2	7.720206	21.6	10855	36.5	2783.69402	30.5
하위중소득국	185	35.5	5.172674	14.5	12762	42.9	3416.45925	37.5
총합계	521	100.0	35.739645	100.0	29780	100.0	9116.148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한편, 우리나라 지자체의 ODA 사업의 형태는 주로 연수생 초청과 봉사단 파견 등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대학, 전문교육’과 ‘교육일반(비특정분야)’가 사업수와 금액이 많았다.

[표 19] 상위 사업분야별 지자체 ODA 현황

상위사업분야	사업수	비율(%)	금액(백만\$)	비율(%)
대학, 전문교육	142	27.3	3.892539	10.9
교육일반(비특정분야)	128	24.6	7.928266	22.2
기타 다부문	57	10.9	10.112664	28.3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54	10.4	0.534533	1.5
농업	51	9.8	4.668198	13.1
보건일반	26	5	0.64787	1.8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5	2.9	0.588091	1.6
식수공급 및 위생	15	2.9	0.424042	1.2
기초교육	9	1.7	0.390796	1.1
기초보건	5	1	0.239658	0.7
비배분/비특정	4	0.8	4.076792	11.4
통신	4	0.8	1.257283	3.5
긴급구호	3	0.6	0.495961	1.4
중고등교육	3	0.6	0.160102	0.4
에너지개발 및 공급	2	0.4	0.14069	0.4
공업	1	0.2	0.126433	0.4
기타 물자지원	1	0.2	0.021012	0.1
임업	1	0.2	0.034715	0.1
총합계	521	100.0	35.739645	100.0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2013년 원조 유형별 ODA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ODA는 프로젝트 원조(63.5%)와 다자기구 지원(15.8%)가 전체의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 ODA는 프로젝트 원조(31.5%), 국제기구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24.1%),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24.0%) 등이 79.6%에 달했다. 즉, 지자체 ODA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원조가 적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연수생 지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원조유형별 ODA 현황(2013년)

(단위: 백만\$, %)

원조유형	전체		지자체	
	약정액	비율	약정액	비율
분야별 예산지원	20.00	(0.8)	-	-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1.21	(0.0)	0.20	(1.5)
다자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s) 지원	420.72	(15.8)	0.46	(3.4)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192.85	(7.3)	3.21	(24.1)
프로젝트원조	1,688.57	(63.5)	4.20	(31.5)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106.93	(4.0)	0.68	(5.1)
기타 기술협력	93.14	(3.5)	1.16	(8.7)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62.54	(2.4)	3.20	(24.0)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0.34	(0.0)	0.24	(1.8)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57.59	(2.2)	-	-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15.02	(0.6)	-	-
총합계	2,658.92	(100)	13.34	(100)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2) 국내 지자체 ODA 주요 사례

(1) 경상북도의 새마을 ODA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ODA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산투자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임한성, 임재강, 2013). 경상북도의 ODA 사업 중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9건(1,133.4만 \$)으로 전체 사업수 대비 75.6%, 금액 대비 74.3%를 차지했다.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ODA 시범사업은 경상북도 새마을과와 KOICA가 주축이 되어 예산집행과 교육훈련, 현지사업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총괄사업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KOICA ODA 교육원, KOICA 현지사무소,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가 교육훈련 및 사업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임한성, 임재강, 2013).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배경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청도군 신도리와 새마을운동 모범부락으로 알려진 영일군 문성리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다는 점과 새마을운동의 발상도이자 종주도라는 새마을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하려는 도민의 의지를 꼽는다. 경상북도는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라진 새마을과를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자 베트남, 중국 등 23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새마을리더 봉사단 해외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외국인 지도자 새마을 연수,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임한성, 임재강, 2013).

[표 21]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개요

항목	내용	성과
새마을리더 봉사단 해외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와 탄자니아, 르완다,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에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을 선발·파견	5개국 15개 시범마을 조성 164명 파견(2010: 30명, 2011: 52명, 2012:82명, 2013: 90명)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매년 대학생, 의료진,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3개월 90여명을 선발해 아프리카, 아시아 3개국에 의료봉사 및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	2007년부터 431명 파견
외국인 지도자 새마을 연수	외국인 지도자, 공무원, 국내 유학중인 저개발국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1~4주간 탄력적인 연수를 실시	2005년부터 62개국 2,467명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53개국 843명, 외국인 유학생 116명)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 조성사업	경북도와 KOICA, UN산하 MP(밀레니엄 프로세스)재단, UNWTO ST-EP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	2009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각 2개소씩 4개 마을 조성

자료 : 임한성, 임재강, 2013, 11쪽에서 재인용.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물질적 원조를 넘어서 새마을교육을 통한 자립의지의 강화라는 ‘경북형 새마을 ODA 모델’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3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착단계(2010~2011)에서는 생활환경기반조성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새마을 조직의 육성, 기초적인 생활환경의 개선, 단위 농업생산량 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

였다. 발전단계(2012~2014)는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마을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마을환경 개선사업, 수리시설의 안정화사업, 복합영농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자립단계(2015년 이후)에는 새마을운동의 광역화와 지속화를 위해 취약구조의 개선, 농외소득의 발굴, 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임한성, 임재강, 2013).

[표 22]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개요

항목	내용			
1. 사업명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2. 사업기간	2010~2015			
3. 사업대상	에티오피아 데베소, 안도데, 아두랄라, 아디스알렘, 마이멕덴 / 르완다 키기라마, 무심바, 기호계, 가샤루 바로 / 탄자니아 키보과, 팡가웨, 징가, 체주			
4. 사업비전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의 공유를 통한 저개발국 빈곤극복 인류공동번영의 보편적 인류애 실천			
5. 사업목표	새마을운동 성공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혜국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극복 잘사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으로 인근 지역 보급 확산 마을의 자립적 새마을운동 역량 제고			
6. 사업주체와 역할분담	수혜국가	경상북도	KOICA	경운대학교새마을 아카데미
	주민참여독려, 사업비 일부 주민부담(노동력, 토 지)	사업총괄 및 평가, 사업비 지원	새마을봉사단 및 사업 관리	새마을연수 및 평가지원
7. 기대효과	수원국 마을의 자립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ODA 모델 정립			
8. 주요경과	2010.5.19.~6.24. 2010.6.27.~7.25 2010.8. 2011.8. 2012.8. 2013.8.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KOICA 일반연수(4주)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연수(4주) 1기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2기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3기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4기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자료 : 임한성, 임재강, 2013, 12쪽에서 재인용.

(2) 서울특별시의 공공행정 및 공공사업 분야 ODA 추진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여 해외도시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자매·우호 도시 및 서울시와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도시에 지원하고 있다. 그중 자매결연과 우호협약을 체결한 도시와는 문화 친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류, 상호 벤치마킹을 목적으로는 공무원 초청 연수, 민간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 참고로 우호 도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양 도시 시장의 합의로 체결 가능하고, 자매 도시체결은 지방자치법 제 39조 10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관련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기준 21개국 2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8개국 27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서울시의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동은 크게 문화관광, 환경교육, 기타 정보(시정 정보 및 행정) 부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방문 형식의 교류가 중심으로 진행했다. 2008년 대비 산업경제, 도시교통 부문의 교류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편이나 주택건설과 환경교육 부문의 교류활동은 감소 추세에 있다.(서울특별시, 2013)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앙부처, 타 시·도와 차별화된 ODA를 개발 및 시행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관계 구축과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해 2005년 12월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ODA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초청연수, 프로젝트 사업, 긴급재난구호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주요 원조사업 규모는 11,587백만 원이었다(서울특별시, 201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29일 설치했고, 2008년 1월 1일 국제협력기금에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개칭했다. 설치목적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관계 구축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외도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 투자인 해외도시 지원을 통해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기금의 용도는 ‘외국 지방도시와의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와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 경비’이고, 기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자매·우호 도시의 우호협력 및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이다.

서울시의 ODA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8건(522.3만\$)으로, 지자체 중에서 ODA 사업이 가장 많았다. 사업 분야 별로는 ‘교육’ 분야가 두드러졌다.

[표 23] 2010~2013 서울특별시 사업분야별 ODA 현황

사업 분야	2010		2011		2012		2013		합계	
	사업수	\$	사업수	\$	사업수	\$	사업수	\$	사업수	\$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34	294,270	32	249,760	22	392,062			88	936,092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7	46,732	10	48,160	10	74,890			27	169,782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1	18,623			4	710,540			5	729,163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31	446,608	31	446,608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1	195,961	1	195,961
보건교육							2	129,726	2	129,726
수입지원(소비재)							1	21,012	1	21,012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11	278,187	11	278,187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교육					1	60,138			1	60,138
의료서비스			1	51,491	2	88,816			3	140,307
임업 개발							1	34,715	1	34,715
전문대,대학(원) 교육	7	471,212	11	617,859	5	522,220	13	425,643	36	36,934
정보통신기술					1	44,408			1	44,408
총합계	49	830,837	54	967,270	45	1,893,074	60	1,531,852	208	5,223,033

자료 : 수출입은행 국회제출 자료, “기관별 ODA 제출현황” 재구성

또한, 2014년도 서울시의 ODA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행정, 전자정부, 교통, 환경, 보건의료, 철도, 놀이공원 등의 사업이 계획되었다. 서울시는 우수시정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교통, 전자정부, 환경(상하수도 등) 등의 교육·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을 통해 서울시 및 유관기관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2015년 3월 3차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의 분야별 원탁회의 및 네트워킹은 8개의 그룹(부서)로 구성했는데, ① 교통(교통정책과, 교통정보과) ② 도시계획·주택(도시계획과) ④ 전자정부(정보기획담당관) ⑤ 환경(기후변화대응과) ⑥ 도시철도(도시기반시설본부) ⑦ 상·하수도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계획과) ⑧ 유관기관 등이다.

[표 24] 2014년도 서울특별시 ODA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국가 수	대상 국가명	사업 분야	사업형태
	합계	2,497		58			
본청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행정석사학위과정운영 (35명) ■ 기간:2014.1월~12월 	13	몽골, 세네갈, 캄보디아 등	공공 행정	장학생 초청
본청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	5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교통,환경등교육연 수(151명) ■ 기간:2014.1월~12월 	24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공공 행정	연수생 초청
본청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지원및봉사자초청 연수(20명) ■ 기간:2014.1월~12월 	2	몽골, 키르기스스탄	보건 의료	연수생 초청
본청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시설개선)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상수도운영기술지원 등 ■ 기간:2014.1월~12월 	1	페루	환경	프로젝트
본청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초청연수)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상수도봉사자초청연 수(30명) ■ 기간:2014.1월~12월 	10	미얀마, 몽골 등	환경	연수생 초청
본청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청소년간문화교류활 동을통한협력도대마련(50 명) ■ 기간:2014.1월~12월 	1	중국	문화	연수생 초청
본청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란바타르시서울문화정보 센터에필요한도서비치,물품 지원 ■ 기간:2014.1월~12월 	1	몽골	문화	프로젝트
본청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철도관계자초청연수 (20명) ■ 기간:2014.1월~12월 	2	리비아,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기타	연수생 초청
본청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사 업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재난상황발생시간급구 호자금및물자지원 ■ 기간:2014.1월~12월 	1	미정	기타	인도적 지원
본청	몽골 울란바타르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란바타르국립공원내어린 이놀이공간및공원조성 ■ 기간:2014.1월~12월 	1	몽골	기타	프로젝트
금천 구	기후변화 대응 몽골 바양노르 슝 국제환경지원봉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환경지원봉사(20명) ■ 기간:2014.7월중순(5박7일) 	1	몽골	환경	봉사단 파견
동대 문구	영시니어 자원봉사자 해외자원봉사활동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프고아원급식,뽕튀기,하모 니카연주,이미용봉사등(1명) ■ 기간:2014.1월~12월(미정) 	1	네팔	기타	봉사단 파견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ODA 추진계획 및 실적”

(3) 강원도

강원도는 ODA 인력 양성 및 도시 지속가능성 분야의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다. 강원도는 자체 ODA 사업으로 2004년부터 농업기술원이 몽골 튜브도내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농업타운은 8.5ha의 부지와 0.5ha의 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하여 몽골 농업인에게 채소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KOICA 등 정부 ODA 사업에 참여하여, 2010년부터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2014년부터 3년간 동카자흐스탄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은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2005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 국제도시훈련센터(IUTC) 설립을 제안하고, 1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유엔 해비타트와 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완공되고 2009년 생활관까지 준공되면서, 2010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유엔 해비타트와 제2차 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는 저개발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국제전문교육기관으로서, 폐기물관리, 도시에너지, 도시인프라,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을 주제로 하여 개도국의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ODA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국제협력실을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사업단을 신설하였는데, 글로벌사업단은 국제교류, 수출, 외자 유치, 남북경제협력 등 해외마케팅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ODA, UNDP 신탁기금, 대기업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연구 및 용역 사업 등을 통해 환경기술과 교육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ODA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체 ODA 사업인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운영 사업을 정부의 의료·농업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의 ODA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되는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KOICA 영월교육원 설립,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모색을 통해 도 내 ODA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표 25]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개발협력 현황(2007~2013년)

2007 ~ 2013	교육훈련				행사 및 협력사업				
	국제훈련 (국내+해외)		국내훈련		국제행사		타 기관 시설이용		국제협력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횟수	인원(명)	MOU 기관
계	38	891	12	508	19	899	44	1,357	23

자료: 강원도, 2013, 도정백서, 168쪽.

[표 26]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훈련 추진 현황(2010~2013년)

연도별	사업내용
2010년	생태도시, 도시관리, 폐기물 관리, 도시인프라, 생태복원 과정 국제훈련 추진(5개과정, 135명)
2011년	주택정책, 폐기물 관리, 도시교통, 기후변화, 도시인프라, 도시관리 등 국제훈련 추진(8개과정, 163명)
2012년	폐기물 관리, 도시에너지, 도시인프라,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 국제훈련 추진(7개과정, 181명)
2013년	슬럼개선, 물위생, 생태도시, 도시계획, 폐기물 관리 등 국제훈련 추진(7개과정, 152명)

자료: 강원도, 2014, 행정사무감사(글로벌사업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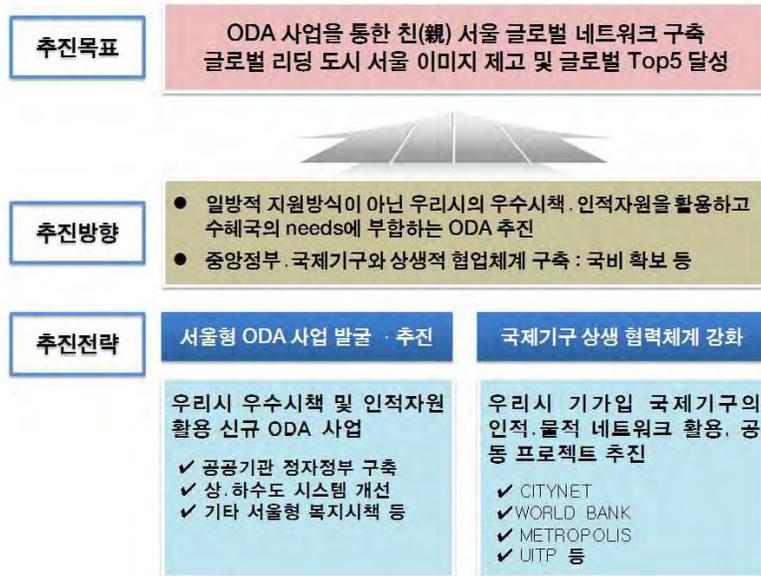
3) 국내 사례의 시사점

이처럼 경상북도, 서울시,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ODA 사업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ODA를 추진하려는 지자체에 주는 시사점으로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③ 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윈조효과성 제고, ④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넘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단위의 ODA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ODA 사업을 통한 친(親) 서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딩 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및 글로벌 Top5 달성’을 ODA의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일방적 지원방식이 아닌 우리시의 우수시책,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수혜국의 needs에 부합하는 ODA 추진’과 ‘중앙정부, 국제기구와 상생적 협력체계 구축 : 국비확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서울형 ODA사업 발굴·추진'과 '국제기구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설정하고, 서울시가 우수시책으로 꼽고 있는 '공공기관 전자정부 구축',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기타 서울형 복지시책' 등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충청남도가 ODA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의 전략적 분야, 도내 인적·물적 역량 등을 고려한 '충남형 ODA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1> 서울시 ODA 추진체계



자료 : 서울특별시, 2013에서 인용

둘째, 조례와 기금 등 ODA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를 두고 있고,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운용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경북형 새마을 ODA 모델'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새마을과와 KOICA가 주축이 되고, 이들 기관간의 협조관계에 의해 예산과 교육훈련, 현지사업관리 등이 종합 관리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실무 추진기관으로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구조이다. 강원도 또한 글로벌사업단을 통해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ODA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실무

총괄을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고, 사업진행은 KOICA와 협의·역할분담을 하고,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⁹⁾

셋째, 지역 내 잠재자원과 다양한 국내·외 협력모델을 통한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ODA 추진전략에 ‘국제기구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자체 사업과 재원 뿐만 아니라, KOICA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지역내 대학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내 ODA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ODA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의 연장선이나, 무역·투자 등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통상교류과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OD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의 기본취지와 목표인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개발목표(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ODA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 사업발굴 시에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선진형 지자체 ODA의 전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의 자원에 기초한 내발적 지역발전, 경제-사회-환경의 상생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 등의 정책 목표와 경험들을 ODA 사업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9) 현재 충청남도의 ODA 추진체계는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 내 중화권팀에서 ODA기본계획 수립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2. 국외 지자체 ODA 사례

1) 국외 지자체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지자체가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부각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으나 당시는 대체적으로 ‘유럽적인 현상’에 머무르는 경향이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민주화, 지방분권화라는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이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조현주 외, 2015).

지자체 국제교류·협력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선진국, 특히 유럽의 변화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UCLG, 2012: 12-13). ①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구축과 상호이해증진 그리고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해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twinning)이 활발히 이뤄진다. 이러한 흐름은 지자체나 지역의 시민사회 조직이 주도했고 전후 갈등 해소와 연계되었다. 이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럽 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탈식민화와 자연재해라는 상황에서 유럽 내·외의 지자체와의 연대(solidarity partnership)를 하기 시작한다. ② 해방 이후 내전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유럽 지방정부는 특정 국가의 지방정부를 지원했다. ③ 19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간 협력이 나타났다. 먼저 북유럽 국가가 주도한 제도적 개발 파트너십 (institu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이 있다. 이는 해당국가가 학교, 보건,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역량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었다. ④ 그리고 남유럽을 중심으로는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들 역할이 강화된다. 지자체의 개발기관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다. 이 시기부터 일부 비정부기구들이 수원국의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지역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이로써 개발협력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multi-actor partnerships)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network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가 형성된다. ⑥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개발협력(business opportunities)이 주된 형태가 되고 있다.

[표 27] 유럽 지자체의 국제 교류 · 협력 형태

형태	초점	시기
1. 자매 결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와 상호이해의 증진, 문화 교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연대/국가재건	시민혁명 후, 자연재해 혹은 정치적 자유	예로 니카라과, 남아공, 최근의 아이티
3. 제도적 개발 파트너십	지방과 지역정부간 협력. 개발협력기관의 대시민 서비스 전달 역량 향상	1980년대 이후
4. 지방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중행위자 파트너십	시민들의 서비스 접근권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위한 지방 및 지역 개발 파트너십	1980년대 이후
5. 분야별 네트워크 파트너십	기후변화 같은 특정 과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1980년대 중반 이후
6. 경제적 동기에 의한 파트너십	경제관계 개입 관점에서 개발 이슈 대처를 위한 전략적 국제적 입장	2000년대 초반 이후

자료: UCLG, 2012, 12쪽, Box3 인용.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개발을 위한 협력, 원조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왔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사회, 기업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개발협력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2차 유엔인간거주위원회, 2001년 유엔 총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한 원조의 논의가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이는 2005년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에서 명시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서 재확인 되고 있다.

2) 국외 지자체 ODA의 의의

현재 국내에서는 지자체 ODA가 분절화된 ODA 체계를 더 분절화시켜 ODA의 통합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국외에서 지자체 ODA는 원조의 효과성 측면에서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조현주 외(2015)는 중앙정부 차원의 ODA에 비해 지방정부의 ODA가 더 효율적이고, 선택 · 집중적이며, 책무성이 높다고

정리하고 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도 원조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ODA의 분산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여국 뿐 아니라, 지원을 받는 파트너 국가 혹은 해당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UCLG, 2011). 즉, ODA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 파트너가 되는 개도국의 지역정부와 다양한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 공동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왔기 때문에 파트너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UCLG, 2011).

[표 28] 지방정부 ODA의 특성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차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중앙정부 ODA에 비해 보다 선택적·집중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분권화 혹은 다층적인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ODA의 책무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경제위기 등에 더 취약함 - 다양한 원조 주체간의 협력과 조화를 정해할 수 있음 - 원조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음

자료: 조현주 외, 2015, 267-269쪽.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정부가 ODA를 수행함에 있어 자극이 되는 동기에 대해 ‘개발에 대한 공동의 책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과 기본적인 인권 확립을 위한 지원’, ‘국제적 위기를 대응하기위한 국제적 의무’,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체간 연대 형성’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개도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 지방정부의 국제적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것, 인구와 도시화의 증가와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한다는 것 등이 있다(UCLG, 2011: 11).

그러나 ODA의 분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도 모두 같은 수준으로 분산화된 ODA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역사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국에서 지방정부의 ODA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스페인과 독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 국가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29] 2002-03년 OECD DAC 회원국의 지자체 ODA

회원국	2002년 규모 (백만달러)	2003년 규모 (백만달러)	양자간 ODA에서 지방정부의 ODA가 차지하는 비중 (2002-03년 평균)
스페인	246.4	321.0	18%
독일	465.4	687.3	11%
벨기에	46.6	59.8	5%
이탈리아	15.8	27.3	2%
스위스	16.1	22.4	2%
오스트리아	2.7	3.9	0.9%
캐나다	14.0	7.5	0.9%
포르투갈	-	1.0	0.5%
프랑스	6.6	39.5	0.4%
일본	5.2	9.9	0.1%
호주	0.7	0.8	0.08%
그리스	0.2	0.1	0.07%

자료: OECD, 2005, 13쪽.

위의 표와 같이 2003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ODA 규모는 독일이 687.3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321백만 달러인 스페인이다. 이 외 국가와는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국가가 집행하는 ODA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과 2003년 평균을 기준으로 스페인이 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과 독일의 지방정부가 ODA에 적극적인 것은 독일의 연방제도와 스페인의 강력한 자치지방(Autonomous Region)과 같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의 지자체 ODA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등은 실제 지자체 ODA 수준은 낮은 편이다.

[표 30]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도와 협력의 분산화 수준

분산화 수준	유럽 연합국가	법적 구조
높음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의함
	독일 (지방, Provincial), 핀란드,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의하지 않음
중간	덴마크, 독일(지역, local), 영국	지방 및 지역 정부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구조 없음
낮음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의함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몰타,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나 지원제도 없음
	체코 공화국, 키프로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제도 없음

자료: Copsey & Rowe, 2012; OECD, 2005; UCLG, 2012(Box4 재인용)

위와 같이 같은 유럽국가 안에서도 비슷한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한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ODA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ODA 관련 기반 구축 및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스페인, 독일, 일본의 지자체 ODA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주요 국가의 지자체 ODA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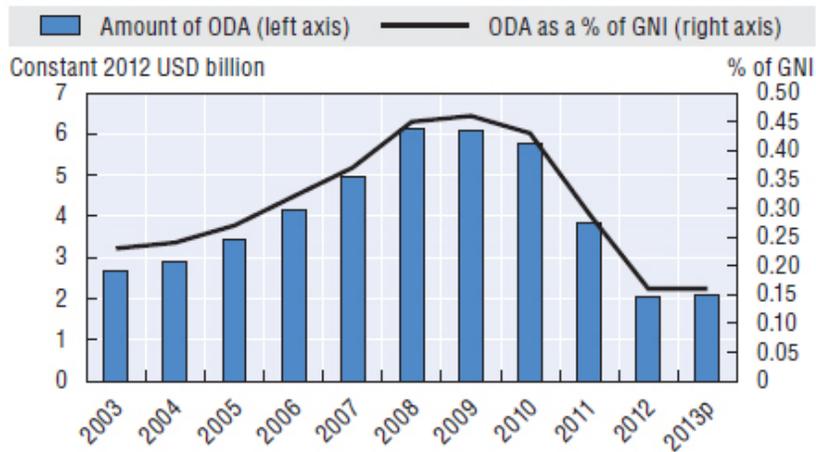
(1) 스페인 ODA 개발재원과 행위자

① 스페인 지방정부 ODA의 특징

스페인의 ODA 규모는 2004년 20억 유로에서 2008년 48억 유로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극감하였다. ODA의 상당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Sub-Saharan Africa)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최빈국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였으며, 2005-2008년 사이 13억 유로의 부채를 면제하기도 했다. 또한 다자간 공적개발원조는 2007년-2008년에는 25억 유로로 증가했다.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Master Plan)을 통해 원조정책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스페인은 구속성(Tied) 차관(Loan)을 더 이상 원조로 인정하지 않고, 중간소득 국가 (Middle Income Countries : MIC)의 부채를 면제함으로써, 개도국의 공적채무구제를 위하여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클럽에서 협의한 기준을 넘어섰다(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1).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스페인의 ODA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11년-2012년 사이 무려 49.7%나 극감하였다(OECD DAC 홈페이지).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ODA 규모가 크게 축소하였으며, 2015년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도 0.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OECD DAC; 주 스페인 대사관 재인용).

<그림 12> 2003-13년간 스페인의 ODA규모 및 GNI 대비 비율



자료 : OECD DAC; 주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재인용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전통적인 개발협력에 재원이 추가된다는 수준을 넘어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지방의 개발협력 사업에는 비정부기구, 지역의 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ODA는 양자간협정을 통하는 지원이 많으며, 대부분이 무상원조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비용은 상당부분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량은 강화되고 더 활발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자원이 된다.

[표 31] 2008년 스페인 ODA의 규모와 관리 유형

	ODA (유로)	ODA 비율 (%)	NGOs에 의한 집행액(유로)	NGO에 의한 집행 비율(%)
중앙 정부	4,138,718,977	86.92	248,669,186	6.01
자치 지방	464,709,158	9.76	308,463,932	66.38
지역 정부	148,775,501	3.12	78,353,407	52.67
대학	9,488,634	0.20	433,684	4.57
합계	4,761,692,237	100.00	635,920,209	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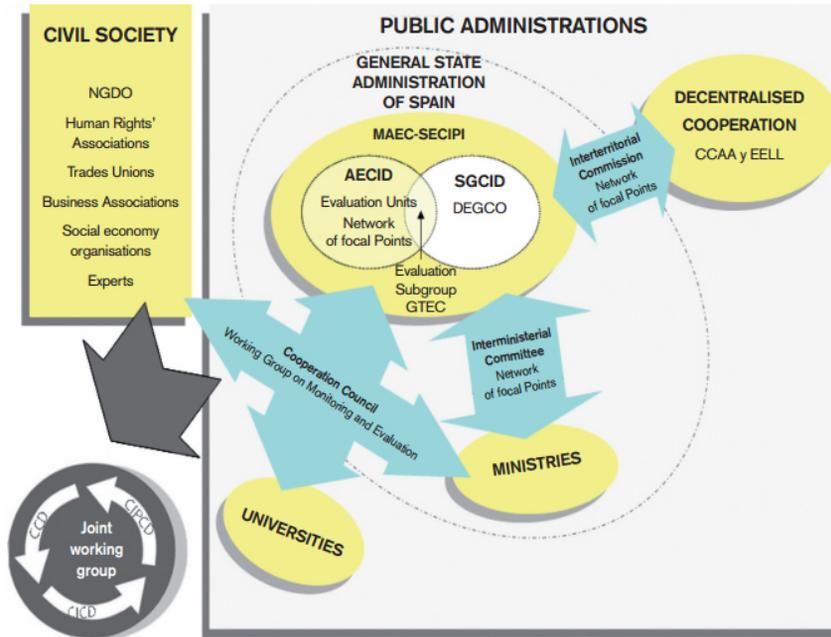
자료: Jorge et al. 2011, 9쪽.

위의 표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ODA비율은 약 87%인데 반해 비정부기구에 의해 진행된 비율은 6%에 그친다. 반면 자치지방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ODA비율은 약 13%임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비율은 50~67%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액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비정부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비용보다 많다. 지방정부들이 비정부기구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분산형원조모델은 관리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은 중앙에 의해 통제, 관리되는 지방자치 ODA의 관리시스템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페인은 나름의 평가 체계를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2년 칙령으로 만들어진 개발정책 평가와 지식경영 분과(the Division of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 DEGCO)의 평가정책이다. 칙령에서는 2년에 한번 개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했으며, 매년 개발정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평가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발협력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체계의 중에는 상위체계인 외교와 협력부서부서(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와 이베로 아메리카를 위한 국제협력국(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or Ibero-America)이 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세부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세부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지역정부들과 대학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의 주요관계자(focal point)와의 네트워크, 워킹그룹 등을 형성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시민사회영역에 비정부기구 뿐 아니라 노조, 경제기구,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Actor)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자의 발굴과 참여는 유럽 전반의 흐름으로 1998년 유럽위원회규정에서는 지역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그룹, 협동조합, 노동조합, 여성과 청년 협회, 교육 및 연구기관, 교회 등 개발협력과 관련한 개발을 위해 기여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Jorge. et la. 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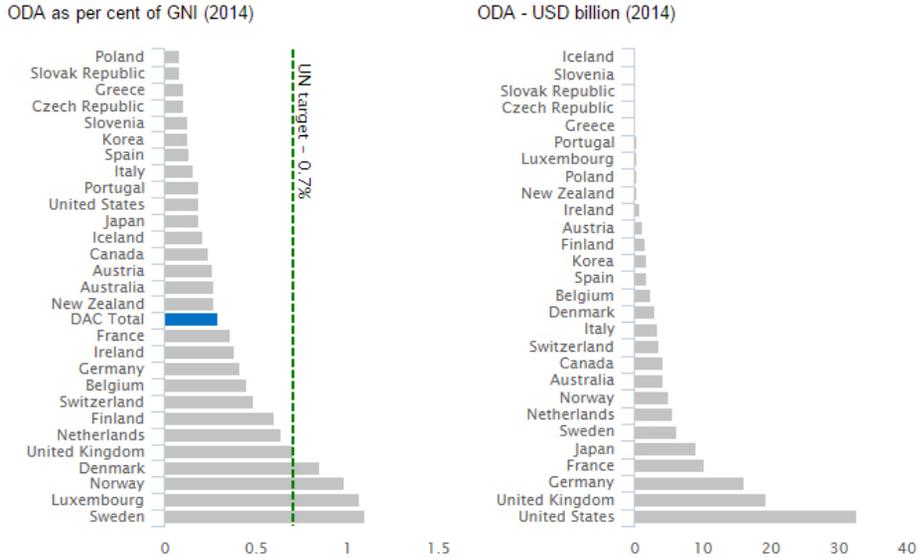
<그림 13> 스페인 개발협력 평가를 위한 절차와 조직



MAEC : Sp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SECIPI : State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or Ibero-America
 SGCID : General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ECID :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GCO : Division of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GTEC : Working Group on Effectiveness and Quality
 자료: Gobierno De España 2013, 12쪽.

비록 2008년 이후 스페인의 ODA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해왔으나, 2014년 기준 스페인의 ODA 총량이나 GNI 대비 비율측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⁰⁾

<그림 14> 2014년 OECD DAC 회의국의 ODA규모와 GNI 비율



자료: OECD 홈페이지

② 스페인 카탈루냐(Catalonia) 자치지방의 ODA 사례

2003년 카탈루냐 자치지방의 원조금액은 약 2,500만 유로(2015년 기준 약 310억원)였으며, 이중 55%는 카탈루냐 자치지방의 개발협력기관(Catal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CADC)에 의해 집행되었다. 지방정부는 각 정부의 특성에 맞게 각자 개발협력계획을 세우는데 CADC는 카탈루냐의 연간 개발협력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평화구축과 개발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지원과 옥스팜(Oxfam)과 같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년도 프로그램에도 지원하고 있다. CADC는 매년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하며, 시민사회, 원조기관, 연구소등 모두가 제안할

10) 이런 점에서 지자체 ODA의 추진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ODA 규모를 가졌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한 스페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 이 제안서는 CADC에 의해 검토된 후 기관장에 의해 사업과 원조금액이 확정된다. 2003년 CADC에 의해 집행된 원조의 2/3는 개도국 사업을 위해 쓰였으며 10%는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카탈루냐원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쓰였다. 프로젝트성 원조는 개발협력계획의 분야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탈루냐는 35%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32%는 생산성과 고용 증대, 18%는 거버넌스를 위해 사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OECD, 2005:18 Box1, Example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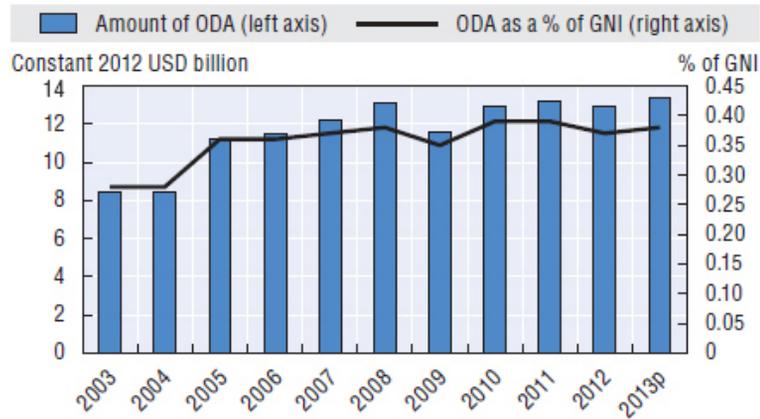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스페인은 개발협력, 개발원조 기금을 대폭 줄였다. 카탈루냐지방 역시 개발원조 예산을 줄였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43%를 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카탈루냐 지역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13,500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부의 전향적인 활동을 발표한다. 이후 CADC를 통해 2,200만 유로를 집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동시에 우선적으로 100만 유로를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리고 지부티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에게 지원했다(Catalan News Agency, 2011). 비록 중앙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원조 비용의 감축을 기조를 세웠으나 카탈루냐는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원조를 실시한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지방정부 중심의 개발원조가 갖는 원조의 유연성이기도 하다. 또한 실행과정에서 비정부기구를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 독일_개발협력정책 가이드라인

① 독일 지방정부 ODA의 특징

독일은 세계적으로 ODA에 대한 기여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독일의 ODA 추진체계는 각 기관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박광동 외, 2014). 독일의 원조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에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나 곧 회복하여 2013년에는 141억 달러를 지원하여 2012년에 비해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로 2013년 국민총소득(GNI)대비 ODA비율은 0.38%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은 양자협력에 의한 원조 중 88.4%가 무상원조로 이뤄지고 있다(OECD 홈페이지 참고).

<그림 15> 2003-13년간 독일의 ODA규모 및 GNI 대비 비율



자료: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c/stats/data.htm>)

독일 지방정부의 ODA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 4,130만 유로이며, 이는 독일 전체 ODA의 8.1%를 차지한다(독일 BMZ 홈페이지, 박광동 외 2014:114 재인용). 독일은 16개의 연방주(Länd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광동 외 2014). 16개의 연방주는 각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이 상호 보완하며 중복을 피하고 각자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주는 자신의 지역에서 개발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5년 OECD가 조사한 지방정부의 ODA규모에서 독일이 스페인에 이어 11%를 차지했지만 이중 상당한 비중이 교육부분에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각 연방주가 개도국 학생들을 초청하는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었다. 2009년에도 연방정부에 의해 집행된 ODA는 약 6만6천2백만 유로였으나, 실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약 4천백3십만 유로에 불과하여 ODA의 편중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의 500개가 넘는 자치단체(municipalities)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에 연방정부의 지원은 없다. 다만, 개발협력 기구인 GIZ와 Engagement Global, Konrad Adenauer Stiftung와 같은 기구들은 지방정부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독일도시협회(German Cities Association: DST)가 분산형개발협력을 위해 회원도시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UCLG 2012: 38).¹¹⁾

②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Baden-Württemberg)의 개발협력 가이드라인¹²⁾

1962년 이후 16개 연방주는 개발협력과 관련한 여섯 개의 결의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현재 연방주에 적용되는 개발정책 가이드라인이 2008년에 수립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방주와 관련한 8개의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8개의 핵심 분야는 ① 기후와 에너지, ② 식량안보와 농촌지역, ③ 이주와 개발, ④ 과학과 기술에서의 협력, 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⑥ 거버넌스와 지역화, ⑦ 문화와 개발, ⑧ 개발관련 정보와 교육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연방주와 같은 일부 연방주는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정책 가이드라인을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원조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되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정부와 연방정부는 원조 활동의 조율을 위해 해마다 개발협력을 위한 위원회(Federation-Länder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개최하고 있다. 연방주의 원조는 교육과 관련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독일 대학의 과정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연방주의 활동은 독일의 개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분야에서의 물품 조달에 있어 공정무역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환경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강력하고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꾸려왔다. 특히 여기에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강조되며, 주정부의 개발정책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주 정부는 2013년 2월 새로운 개발정책 가이드라인(Entwicklungspolitische Leitlinien)을 승인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1,500명의 시민, 120개의 시민조직과 기관들의 참여와 자문을 얻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정책은 주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국제적

11) 독일에는 행정부체계상 가장 작은 단위인 지방자치단체들(municipalities)이 11,500개가 존재한다. 이들은 지역수준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시각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점 더 많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한 지역 정부 기관으로는 도시연합(Deutscher Städtetag), 소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Deutscher Städte- und Gemeindebund) 그리고 자치구연합(Deutscher Landkreistag)이 있다. 이들은 개도국 파트너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12) 이 내용은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인터넷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http://www.entwicklungspolitik-deutsche-laender.de/>)

인 내용을 학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육정책,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경제 정책,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들이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을 지원하고 계획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협력재단(Stiftung Entwicklungszusammenarbeit)과 개발협력을 위한 바덴뷔르템베르크재단(Baden-Württemberg Stiftung)을 설립했다. 개발협력재단 사무소가 주정부 산하에 만들어졌으며 모든 개별 시민, 시민사회조직, 주정부 기관, 지역 정부 그리고 주 의회 등이 직접 혹은 다른 믿을 만한 정부기관을 통해 개발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협력을 위한 바덴뷔르템베르크재단은 1991년 주 입법회의(Legislative Assembly)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개발협력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우선 지역에서는 공정무역 관련한 지원이 있다. 공정무역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어온 무역과 소비행태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로 주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정책을 만들고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확대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공정무역, 지구적 책임 그리고 지속가능한 무역과 관련한 사업, 재정, 관광, 개발협력과 관련한 ‘The FAIR HANDELN’를 개최하기도 했다(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3세계 시민과 선진국 시민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공정무역은 흡사 소비자운동과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인 선진국의 시민, 지역사회가 상품의 구매를 약속하는 대신 개도국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친환경 공급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재단은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개도국인 부룬디(Burundi)에서 진행되는 ‘식목을 통한 삼림 벌채 감소와 개선된 화덕도입 (Reduction of Deforestation by Planting Trees and Introducing Improved Cooking Stoves in Burundi)’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13-2014년 진행된 이 사업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되었다. 주요 활동은 화덕을 사용하는 4개의 마을(Kagwema, Rukaramu, Maramvya and Gateri)에 효율이 높은 화덕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땀감을 얻기 위해 행하는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벌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식수공급, 식량, 땀감 등 삶을 위한 기초적인 자원이 필요했고, 땀감을 얻는데 평균적으로 소득의 1/3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땀감을 구매하기보다 불법적인 벌목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 사업으로 6만개의 나무가 심어졌고, 천개의 효율이 높은 화덕이 지원됐다. 효율이 개선된 화덕덕분에 나무의 사용량은 반으로 줄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림관리와 화덕의 제작을 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산림이 관리되고 망가진 화덕을 고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Global Nature Fund 홈페이지).

이러한 재단을 통한 활동 외에도 주정부는 지역대학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해외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학기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2014/15년의 경우 학기당 2천400유로, 한 학년에 3천600유로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주정부는 이런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 년에 한번씩 개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_지자체의 ODA 추진 동기¹³⁾

① 일본 지방정부 ODA의 특징

일본 ODA 규모 중 지방정부 참여 비중을 보면, 2002~03년에 0.1%였다가 2008~09년에는 0.5%로 상승하였다. 다만 이 통계에는 지방정부 자체의 프로젝트(locally independent projects)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정부 자체 프로젝트는 1998년 7,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방정부 자체 프로젝트 규모는 일본 ODA 대비 1992년 0.4%였으나 2005년엔 0.9%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ODA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JICA의 풀뿌리 기술 협력이나 CLAIR의 지방 정부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CLAIR의 국제협력 자료에 따르면, 국제 협력의 형태는 개도국 전문가 및 관료의 훈련 승인, 개도국으로 전문가 파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국제 기구와 파트너십, 국제적인 도시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일본 내 47개 현(prefectures), 20개 "지정 도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42개 "중심 도시"(인구 30만 이상 도시)가 국제 협력 형태에 한 번 이상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본 지자체 단위의 국제협력 참여는 엇갈린다. 1997~98년에는 80%의 핵심 도시들이 국제 협력에 참여하였으나, 2005년에는

13) 다음 문헌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Takao, Tasuo, 2014, "Local Levels of Participation in Japan's Foreign Aid and Cooperation: Issues Arising from 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urvey, 54(3), 540-564.

이 비율이 40%로 떨어진다. 반면, 현과 지정 도시들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도시들은 주로 기술 훈련 승인 형태에 특화되어 있다. 현의 82%와 지정 도시의 92%도 JICA가 재정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국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 반면 핵심 도시들은 90% 이상이 독자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도시들은 그들의 재정자립도(financial capacity index)가 떨어지자 독자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반면, 현과 지정 도시들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1998년을 피크로 지방정부의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지출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이한 것은 훈련 및 파견 분야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이나 도시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5개 현과 8개 도시들이 이런 파트너십과 도시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지침이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정부 독자적인 재정으로 운용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국제 조직과의 프로젝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시가현, 기타큐슈시, 요코하마시는 모두 지자체 외부의 국제개발협력 조직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자신들의 특별 행정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반-농촌인 시가현은 1986년에 부문별 네트워크(국제호수환경위원회 협회)를 설립하였다. 가장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지역인 요코하마시는 재정역량과 해외 사회적 연계성,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자, 무역 의존도 등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인 기타큐슈시는 요코하마시에 비해서는 인구나 재정역량이 낮지만, 30년 이상의 국제 환경 및 기술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② 시가현과 국제호수환경위원회

시가현과 UNEP는 국제호수환경위원회(International Lake Environment Committee, ILEC)를 함께 설립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지방정부가 국제 기구 및 개도국과 함께 국제협력에 참여한 가장 빠른 사례이다.

ILEC는 국제 비정부 상설 위원회로, 1986년 시가현 정부가 유치하였다. 주요 임무는 호수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UNEP가 개도국을 위한 설립 제안한 것이다. 시가현이 UNEP와 파트너십을 형성한 초기 동기는 시가현의 비와호의 수질 악화를 우려하면서, 국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비와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학습을 촉진하고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함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ILEC는 남-북

협력의 맥락에서 모든 파트너들이 호수 환경 거버넌스에 관해 학습하고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산화된 환경 협력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오염된 비와호는 정치적인 의제로 등장했고, 1974년 선거에서 환경 개혁주의자인 다케무라 마사요시(Takemura Masayoshi)가 당선되면서 국제환경협력을 포함하는 자원 동원이 시도되고, 1978년 재당선된 이후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시가현 주민들 및 공무원들의 비와호 보호 의식과 학습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캐나다 육수 센터(Canada Centre for Inland Water)의 연구자들이 초청되었고, 뉴질랜드 타우포 호수(Lake Taupo) 사례가 검토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독일 콘스탄스호(Lake Constance)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런 컨퍼런스 등은 환경정책 네트워크 구성의 초석이 되었다. 1984년 첫번째 세계 호수 컨퍼런스(World Lake Conference)가 시가현에서 개최되어 28개국에서 2,400명이 참석하였고,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다. UNEP 사무총장인 Mostafa Tolba는 2년에 한 번 세계 호수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국제상설위원회를 제안했다. ILEC의 재원은 국제적인 기부단체의 프로젝트 지원과 일본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조달되고 있다.

③ 기타큐슈시_녹색도시와 환경산업

지난 30년 동안 기타큐슈시는 환경 기준을 동아시아에 이전하는 센터라는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에 기타큐슈는 일본의 가장 큰 산업 지역 네 곳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가장 오염된 지역이 되었다. 오염된 도카이만(Dokai Bay)은 죽음의 바다로 불리었다. 1971년 기타큐슈 오염 방지 법이 제정되고, 대규모의 하수처리 설비가 완성되고, 1972년 54개 공장과 기타큐슈시 사이에 오염방지 협정이 체결되었다. 1970년대 중반 도카이만은 대대적으로 준설되어 350,000m³의 오염된 슬러지가 제거되었다. 운영비용으로 총 20억 엔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 71%는 기타큐슈 기업 부문이 29%는 지방정부가 부담하였다. 하천 및 호수 오염 외에 강변에 불법으로 지어진 주택들의 오염도 문제였다. 슬러지 준설과 제거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완료되었다. 1985년에 OECD 환경 보고서는 기타큐슈를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전환된 도시"로 소개하였고, 기타큐슈는 환경기술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였다. 1980년 시는 KITA를 설립하여 개도국에 전문가와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수에요시 코이치(Sueyoshi Koichi) 시장은 환경정책과 기업 기회를 함께 잡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기타큐슈의 국제 환경 협력의 기원은 1981년 기타큐슈시의 자매 도시인 중국의 대련에서 세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오염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연 것에서 시작된다. 1993년 환경기술에 대한 중국-큐슈 심포지엄에서, KITA의 원장은 기타큐슈와 대련의 협력하여 "대련 환경 모델 지역"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1995년에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련 환경 모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ODA 요청을 하였다. KITA는 JICA의 도움을 받아 중점오염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기업들이 오염의 원인을 찾도록 돕고, 방지시설 설치와 청정 생산 계획을 제안했다. 2000년에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련 환경 모델 지역 - 개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대련의 환경 보호 노력은 기타큐슈의 환경보호 기업들 및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큐슈의 대표적인 기업인 신일본 화학환경자문 회사와 Aqua Tech Co.사가 2005년과 2006년에 대련에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1997년 일본에서 오염 무배출 사회 촉진을 위한 생태도시 프로젝트가 도입되었다. 기타큐슈 생태도시는 아시아의 국제적인 자원순환과 환경 산업 기반 도시로 자리매김 하려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첨단 재활용 설비를 개발한 기업들을 유치했다. 중국의 톈진(2008), 칭다오(2007), Suzhou(2005)에서 재활용 생태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와 현장 조사도 진행하였다. 현재 중국의 도시들과 생태도시 협력 사업이 기타큐슈를 모델로 진행 중에 있다. 기타큐슈시는 아시아 18개 국가의 62개 도시와 기타큐슈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통로로 하여, 환경기술 이전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④ 요코하마시_국제도시의 경험과 이미지

요코하마는 1858년부터 개방정책(open-door policy)의 허브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과 외국 문화와 상품의 유입과 일본인과 일본 문화와 상품의 유출은 지금까지도 요코하마항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일본과 세계를 잇는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설문조사 결과, 요코하마 시민들의 60%는 요코하마시에 직접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개도국의 환경 위험을 줄이는 협력을 계속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정서때문에 요코하마시의 리더들은 일본의 국제화 센터로서 시를 육성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었다.

1987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간 정주 개발을 위한 지방 정부 회의는 지역 네트워크인 CITYNET를 설립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사회

적으로 공정한 도시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1992년부터 요코하마는 CITYNET의 새로운 사무국이 되었다. 또한 요코하마시는 남-남 협력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요코하마시는 다양한 국제 기구 사무소들을 유치했는데, 1986년 국제열대삼림조직(ITTO), 1996년 세계식량프로그램(WFP), 1997년 식량농업기구(FAO), 2004년 UN 대학-고등학술연구소(UNU-IAS) 등이 그 예이다.

CITYNET의 재정은 저소득 회원 도시들의 예산에서 충당되었기에 남-남 협력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CITYNET에 거의 없었다. 2003년 사무국은 '클러스터' 접근을 채택하여 환경, 기반시설, 새천년개발목표, 재난관리, 정보기술 등에 대한 비슷한 수요를 가진 회원 도시들을 묶은 후에, 도시간 협력의 목표, 방법, 기대 결과 등을 분명히 하는 협력규약(memorandum of cooperation, MOC)을 통과시켰다. 2004년 CITYNET는 MOC가 책임성과 비용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일본 중앙정부의 ODA 지원을 신청하였다. JICA의 지원을 받은 풀뿌리 협력 체계를 통해 CITYNET는 환경교육인지(AWAREE) 프로그램(2004-07)을 하노이와 프놈펜에서 진행하였다. CITYNET는 나중에 Colombo, Dhaka, Da Nang(베트남), Makati(필리핀)에서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에 대해 지방정부 관료와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Post-AWAREE Project(2007-10)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JICA가 참여함에 따라 회원 도시들의 중앙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이들 중앙정부들이 CITYNET이 제기한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함에 따라, 요코하마의 국제정책사무소는 국가-지방 연결이 CITYNET 회원 도시들에게 성공적이고 유용하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 기타큐슈와 달리 요코하마는 경제적인 이득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지만, 2011년 국제 환경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내놓고 있다.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스페인, 독일, 일본의 국외 사례들이 충남의 ODA에 주는 시사점을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 고양,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미미한 한국 지자체의 ODA 여건과 국외 사례를 직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사례 국가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흐름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ODA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충남의 국제개발협력이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를 중심으로 유엔이나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점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으로 관계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역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로까지 내려왔다. 특히 스페인 자치지방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사례는 지방정부, 대학,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하는 상향식 ODA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런 개발협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지역기반의 기업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또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도 ODA를 통해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개발협력의 대의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의 직·간접적인 개발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둘째, 충청남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 내 시민사회영역이 ODA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사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학교, 기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확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개발협력이 추진되기 어렵거니와 지방정부의 ODA가 가져다주는 많은 장점이 상쇄되고 만다. 따라서 충남 내 연구소, 대학,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해외 장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교육과 관련한 지원은 단기 연수생을 지원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장기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현지의 개발 파트너로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충청남도의 OD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자체 ODA는 중앙정부나 다른 ODA 파트너와의 협력이 결여된 경우 분절화라는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각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원조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험을 공유하면서 분절화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충청권 지자체간의 연례 개발협력회의나 원조기관과 함께하는 포럼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청남도의 ODA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독일과 스페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큰 틀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국제협력 참여 동기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충청남도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기반으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확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파트너국가, 지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의 특화된 개발협력분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충남의 ODA 추진 방향

1. 충남의 국제교류 및 ODA 현황

1) 충남의 국제교류 현황

(1) 충남의 국제교류 추진체계

충청남도는 2008년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국제화를 촉진하고 교류의 이익이 도민에게 귀결되며 나아가 세계 속에 우리 도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국제교류의 기본이념으로 ①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②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③ 충청남도과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해외 거주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실시되던 국제협력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1994년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했다. 국제통상과의 예산은 2013년 57억원, 2014년 55억원이었다. 민선6기에 국제통상과는 기업통상교류과로 개편되고 구미주팀, 중화권팀, 아주팀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화팀에서 ODA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맡고 있다.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지자체

충청남도는 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1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지역별로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의 각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우호협력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9), 러시아(2), 일본(2)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 베네주엘라, 베트남, 우크라이나, 브라질, 캄보디아 등의 1개 자치단체와 체결하고 있다. 충남 시·군의 경우 12개 시·군이 7개국 3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13개 시·군이 31개 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우호

협력 지자체인 베트남 롱안성(2005년 체결)과 캄보디아 씨엠립주(2008년 체결)만이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에 속한다. 이는 충청남도 내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서천군이 2008년 몽골 옥탈채담, 첼, 자마르와 우호교류를, 청양군이 2007년 몽골 아르항가이와 우호교류를 맺은 정도이다.

<그림 16> 충청남도 국제교류 현황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MENU01053)

주요 교류대상도시는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충청남도는 구마모토 현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일(1998.1.22)에 맞추어 구마모토 현청에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인적 교류 외에 행정시책 의견교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일본 구마모토현과 매년 1, 2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 구마모토 연락관은 일본, 특히 구마모토 현 등 교류 협력지원, 일본의 최신산업기술 등 각종 정보수집, 충남 관광지와 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활동, 교민과의 유대강화 등 민간차원의 교류역할을 지원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구마모토 현에서도 충청남도에 파견을 보내어 행정연수와 도내 민간단체 등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구마모토 외에 LA(2008년 개소)와 상하이(1999년)에도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1996년에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창립회원으로 가입하였다. NEAR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6개국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독립적인 지방협력기구이다. 1996년 창설 이래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의 73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5개의 읍저버 자치단체, 2개의 국제 지역협력기구(AER, R20)와 지역의 전문연구소 등을 파트너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연간 100만달러의 운영비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다.

<그림 17>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구성도



자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neargov.org/kr/>)

(3) 민선6기 충청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충남 민선6기의 국제교류 목표는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충남”으로 설정하고 환황해권 초국경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기 위한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32]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단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매력있는 투자여건 조성	-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정비 - 분야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 충남브랜드 가치 제고
선제적 투자유치 추진	- 해외홍보·판촉활동 강화 - 중국 현지 투자유치센터 운영
산업별 해외교류 증진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해외 틈새시장 개척
분야별 국제교류 강화	- 범아시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국제교류강화
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	-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확충 - 국제항공, 해운항로 개설
인적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국가별 전문가 풀 구축 - 국가별 현양 대응체제 구축

자료: 충청남도, 2014, 환황해프로젝트팀 추진과제 검토. 송두범·홍원표, 2015에서 재인용

최근 충남 민선5기와 민선6기의 핵심 전략인 3농혁신과 관련하여 한·중·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2015년 9월 개최)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북아 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비전 및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한·중·일 등 각국 중앙·지방정부의 공통된 가치와 목표로서 3농정책을 매개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 충남의 ODA 사업 현황

(1)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과정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2013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의 지원을 받아 ODA 사업을 운영하였다. 글로벌 시대 저개발 개발도상국가와 협력, 동반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개도국의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벼 재배 선진농업기술 연수’ 사업이다. 2013년 7개국 18명, 2014년 8개국 14명, 2015년 7개국 12명의 농업전문가가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는 3주에 걸쳐 강의, 워크숍, 현장견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한국의 녹색혁명, 새마을운동, 쌀산업, 한국의 벼 품종 및 재배양식, 벼 기계이양과 재배기술, 고품질 쌀 생산기술, 벼 주요 병해충 종합관리 및 실습, 벼 시비처리 및 토양관리기술, 논 잡초 방제기술, 쌀 품질 및 쌀 품질의 구성요소, 쌀 품질 분석기술 및 조사방법,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전략, 농업회계시스템의 중요성의 내용을 다룬다. 워크숍은 연수생들이 자국의 벼 재배와 관련된 액션플랜을 짜는 과정이다. 견학은 주로 충남 내 벼 재배 관련 현장(보령 통합 RPC, 서산간척지 등)이나 농업 관련 현장(체험농장, 예산국화시험장, 청양구기자시험장, 논산딸기시험장, 금산임삼약초시험장, 농산물도매시장), 충남 내 주요 관광자원(백제문화단지, 한산모시관, 국립생태원 등), 산업체에서 이루어진다.

(2) 아산시 농업기술 연수

아산시는 2007년 탄자니아 무완자시와의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2008년부터 농업개발기술연수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6개월 동안 3개국(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에는 4개월 동안 3개국 5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농기계 활용, 축산, 과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KOICA와 MOU를 체결하여 2010년부터는 KOIC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5개월 동안 5개국(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 르완다) 13명, 2011년에는 68일 동안 6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13명, 2012년에는 80일동안 7개국(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수단, 우간다) 19명, 2013년에는 60일 동안 9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콩고) 18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주로 벼농사, 특화작목, 축산, 농기계 등의 농업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윤성필, 2014).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ODA는 벼 재배가 주요 주제라 주로 아시아의 농업전문가가 참가한 반면,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 ODA는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다(윤성필, 2014).

다만 국내 농업여건 및 농업기술과 아프리카의 농업여건 및 농업기술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연수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아산시가 농업도시라기보다는 산업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기술을 주제로 한 ODA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윤성필, 2014).

(3) 충남 내 대학의 ODA 사업

충청남도 소재 대학들이 KOICA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해오고 있다. 대학 파트너십 사업으로 ODA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과 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 수업을 개설하는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에도 참여해왔다. 다만, 충남 내 대학들의 ODA 사업들은 대학 내 사업으로 국한되어, 충남 내 관련 주체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충남의 ODA 역량 구축 등과 연계되지는 못하였다.

[표 33] KOICA 민관협력사업 참여 충남 내 대학 현황

대학명	대학 파트너십 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ODA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	자체발굴개발협력사업	
순천향대학교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기능강화사업 외	글로벌버디 프로그램	2014년, 2015년
공주대학교	-	-	2013년
백석대학교	-	-	2014년
남서울대학교	-	네팔 지역사회 개발(KCDC 설립)	-
나사렛대학교	-	-	2014년,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2014년, 2015년
단국대학교	몽골-치과대학 인력양성 사업	-	-
상명대학교	캄보디아 ODA프로젝트 협정 체결(2015)	공고 DR공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2014)	2015년
청운대학교	베트남광남성초등학교ODA사 업(2014)	-	-

자료: KOICA 내부 자료

2. 충남 ODA 추진 방향

앞서 국내·외 ODA 흐름 및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외 ODA 동향에서는 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하는 국내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필요, ② 지자체 ODA에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 필요,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자체 ODA 추진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국내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③ 지역과 국내의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④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넘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국외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 고양,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등 네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여 충남 ODA의 추진 방향을 ① 국내·외 ODA 동향을 반영한 충남 ODA 기본 원칙 정립, ②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③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축, ④ 충남 ODA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⑤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표 34] 충남 ODA 추진 방안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충남 ODA 추진 방안
	국내	국외	
① 유엔 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한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진	① 충남 ODA 기본 원칙 정립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②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③ 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③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축 ④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킹 강화
②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 반영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ODA 추진	④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⑤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 사회 분야 - 경제 분야 - 환경 분야

1) 충남 ODA의 기본 원칙 정립

충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ODA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충청도민들이 ODA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 ODA의 추진 동기는 일본 기타큐슈처럼 지역 내 기업(공공, 민간)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일수도, 유럽의 도시들처럼 협력 대상국의 빈곤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서울시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원칙은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수원국의 수요 고려, 원조효과성, 예측가능성, 책무성, 지속성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충남도에 맞게 해석·적용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ODA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담아야 한다. 이미 충청남도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분야 24개, 사회분야 24개, 환경분야 22개, 행정제도분야 18개, 배경분야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이 잘 연계되고 있는가, 기존 분야별 사업들이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충남에 맞게 적용하고, 충남 ODA의 기본원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DA 사업이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대규모 토목사업과 시설 설치 위주의 개발사업이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이 아닌 보다 지방화된 규모의 대안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유형의 ODA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충남의 경우 ‘내발적 발전’을 모토로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등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토대로 지역에 성과를 남기는 방식의 대안적인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화된 경험이 보다 지방화된 ODA 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최빈국의 절대빈곤 극복이나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넘어서, 충청남도 도정의 핵심 키워드인 ‘행복’을 충남 ODA의 키워드로 삼아, ‘충남형 행복 ODA’를 브랜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5]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 인도적 지원 및 협력대상국의 빈곤과 사회문제 해결 -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충남의 인지도 상승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남 내 해석·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검토 -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연계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추진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지방화된 규모의 대안적 ODA 사업 추진 - 충남의 내발적 지역발전 담론 반영 - 도정철학인 '행복' 을 키워드로 한 ODA 원칙 구상

2)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ODA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원기관 설립 또는 위탁,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4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도민참여, 전문인력의 양성,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충남 ODA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고 추진체계와 연차별 사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15년에 경기도 ODA의 전략적 방향성과 세부 프로그램을 담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선진화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국제개발협력기금’ 등을 조성하여 충청남도 자체 ODA 재원을 확보 노력과 함께, 외교부 및 코이카의 ODA 사업과 연계하거나 MOU 체결, 충청남도 소재 기업들의 ODA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유도, 국제기구의 ODA 사업과 연계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표 36]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 기존 국제교류·협력 조례에 ODA 지원 규정 추가 - 또는 ODA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사례)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 충남 ODA의 비전과 전략 - 충남 ODA 추진체계 - 연차별 ODA 사업
	충남 ODA 재원 확보	- 국제개발협력기금(가칭) 조성 - 외교부 및 코이카 ODA 사업 연계 - 지역기업들의 ODA 사회공헌활동 유도 - 국제기구 ODA 사업 연계

3)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축

충남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ODA 추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ODA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ODA를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다. 때문에 충청남도의 지자체 ODA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 필요성, 역량 등이 갖추어지는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ODA 추진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먼저, 채지원 외(2014)에서 제안했던 ‘국제교류추진위원회’나 ‘국제교류추진단’ 등 국제교류나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기 어렵다면, 국제교류나 국제개발협력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 ODA 관련 활동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의 역할에 ‘아시아 지역 세계유산 등재 지원’을 추가할 수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충남 적정기술 에듀파크의 역할에 ‘개도국 적정기술 지원’을 포함시키고 충남 및 국내·외 적정기술 교육과 실천 조직들과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국제교류추진위원회’나 ‘국제교류추진단’이 구성된다면, 이 안에 ODA 분과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ODA 분과에서는 ODA 관련 포럼 등을 통해 충남 ODA의 방향 설정 및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거주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ODA 교육, 설명회, 간담회, 홍보, 지역 ODA 사업 지원, 네트워킹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계획이다. 코이카, 지자체, 지역 내 국립대가 MOU를 체결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넷째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구와 협력하여 충남 내 ODA 관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원도가 UN-HABITAT와 협력하여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운영하거나 KOICA의 Korea World Friends 영월통합교육원을 유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표 37]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ODA를 추가 - 가령,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충남 적정기술에듀파크 사업 등에 관련 분야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또는 국제교류추진단 구성 시 ODA 분과 포함 - ODA 포럼, 충남 ODA 계획수립, 네트워킹 형성 등의 역할 수행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 코이카의 지역별 지자체-대학 연계 ODA 지원 센터 설립 사업 - 충남 내 ODA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대학과 충남ODA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	- 충남 자체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ODA 센터 설립 - 필요시 국제기구 및 국가의 지원

4)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강화

인력, 예산, 기술 등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ODA를 함께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육성하고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충남도는 구체적인 ODA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대안적인 지역발전 경험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ODA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이 충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할 수도 있다. 사업의 전 과정(발굴, 집행, 사후관리)에서 지역 내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이 만들어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충남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¹⁴⁾

1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 지방정부의 ODA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추진해 온 개발협력 외에 비정부기구, 지역의 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스페인 자치지방의 ODA는 NGO에 의

이미 충남 내 많은 대학들에서 ODA 종료프로젝트의 사후관리사업, 자체발굴 개발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외에도 충남도 내의 시민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여성과 청년 협회, 농민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종교 등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충남도 내 대학에 ODA 관련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거나 농업기술원이나 인재개발원 등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웃한 세종시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조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지식 및 정보를 상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충남이 맺고 있는 자매·우호 도시 중 최빈개도국과 중·저소득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NGO와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거나 NGO 활동 자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점협력국과 기본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부/기관/NGO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다.

[표 38]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충남 ODA 주체 발굴	- 충남 내 대학의 ODA 사업 현황 검토 - 충남 및 시·군의 ODA 사업 현황 검토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 충남내 대안적 지역발전 주체들의 ODA 사업 참여 지원 - 충남 인근 국책연구기관과의 ODA 사업 협력
	ODA 추진 NGO 지원	-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공모 지원 - NGO 대상 충남 ODA 공모 사업 추진

5)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첫째,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ODA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를 가능한 한 좁히고, 대상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지역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 지자체 ODA 사례처럼 오랜 기간 역사·문화·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국제교류·협력 도시와 ODA 방식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구상해볼 수 있다. 또는 중점협력국을 아시아 지역, 중·저소득국 및 최빈국, 국내 중점협력국가로 범위를 좁힌다면 미안마, 캄

한 집행이 66.4%에 이를 정도로 NGO 협력모델이 활발하다. 대부분 양자간 협정과 무상원조로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자원이 확보된다.

보디아, 라오스가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다. 또는 기존 국내 국제교류 및 ODA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ODA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국제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 국가들은 어떤 개발협력 수요를 가지는지 검토하고, 이를 충남이 지닌 강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조사·작성하는 ODA 중점협력국 26개 나라에 대한 국가별 협력전략을 참고하되, 충남도 자체적인 지역 연구 및 협력전략 도출이 진행될 필요도 있다.

둘째,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국제교류 사업이나 최근 충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협력대상국 농업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남의 특징인 농업을 주제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농업ODA 사업을 충남의 독자적인 ODA 사업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를 넘어서 충남의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재정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정부3.0)를 ODA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민선6기의 도정 목표인 3대 혁신(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혁신)과 3대 행복(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환경)을 기준으로 ODA 사업들을 구상하고 배치해볼 수 있다. 개도국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내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갖는 영역이나 사업들이 도출된다면, 제안된 사업들을 가지고 충남도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ODA 대상국의 수요 조사를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충남의 현안 사업들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충남도 함께 편익(benefits)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적정기술, 오염토양복원사업, 하구·연안 복원,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신청 및 관리, 다큐제작 지원 등이 그 예이다. 충남의 현장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충남의 문제 대응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ODA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표 39]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중점협력국 대상 충남 국제교류·협력 지자체 확대 - 중점협력국가와 협력지자체의 ODA 수요 조사 및 지역연구 수행
	중점협력분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ODA 사업화 - 기존 ODA 사업의 심화 - 충남 전략사업의 ODA 사업화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 - ODA를 통한 대안 모색 및 국제협력 강화

제5장.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 요약

국내·외 ODA 동향에서는 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하는 국내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필요, ② 지자체 ODA에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을 반영 필요,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자체 ODA 추진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국내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③ 지역과 국내의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④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넘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국외 지자체 ODA 사례에서는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 고양,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등 네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40]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	국외
① 유엔 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한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진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②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 반영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ODA 추진	④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충남 ODA의 추진 방향을 ① 국내·외 ODA 동향을 반영한 충남 ODA 기본 원칙 정립, ②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③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축, ④ 충남 ODA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⑤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추진방향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41] 충남 ODA의 추진방향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남 내 해석·적용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충남 ODA 자원 확보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충남 ODA 주체 발굴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ODA 추진 NGO 지원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 선정
	중점협력분야 설정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

2. 정책 제언: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지자체 가운데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OD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는 ODA 추진기반(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는 농업분야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ODA에 관심이나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충남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충남도민 및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조례, ODA 전담 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국제교류·협력사업,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농업분야 ODA 사업,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환황해프로젝트,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등의 ODA 관련 사업들을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충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는 작업을 통해 충남 내 ODA 관련 사업들과 주체들을 발굴하고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공통된 번영을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총체적인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충남의 ODA 중점사업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존 농업·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충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가칭)’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인식 조사, 전문가 설문 조사,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분야	중점사업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존 농업·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1)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

(1) 기존 농업·농촌 ODA의 확장

충청남도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도 민선5기와 민선6기에서는 3농혁신을 주요 국정목표로 채택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ODA 분야에서도 농업을 주제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기존 농업을 주제로 한 연수 프로그램의 규모(연수자 수, 연수 기간 등)를 키우거나, 농업ODA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하여 농업을 주제로 한 대학원 과정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6차산업화, 유기농업, 지역순환농업, 농어업유산관리,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충청남도 농업현안에 대한 주제를 특화시켜 농업ODA 프로그램화 할 수도 있다. 현재 3농혁신을 매개로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동남아시아 등 협력대상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경상북도와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ODA를 농업ODA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ODA와 차별화되는 충남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적정기술 ODA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들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때문에 적정기술은 최빈국에서 비용 대비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간단한 휴대용 정수 빨대에서부터 무동력농이터나 초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정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단의 ODA 사례도 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효율이 높은 화덕을 지원함으로써 불법적인 삼림 벌채를 줄이고 주민 스스로 삼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개도국의 역량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2013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지원사업으로 사단법인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캄보디아 글로벌 물 적정기술 현지거점센터 설치를 채택한 바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역별로 적정기술협동조합이 조성되는 등 적정기술 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목난로, 화덕, 생태건축, 바이오에너지 등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일환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고 전시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적정기술 에듀파크(충남적정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적정기술에듀파크를 활용하여, ① 국내외 적정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② 최빈국에 적합한 '적정기술 ODA'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정부(미래부, KOICA 등)와 함께 추진하며, ③ 지역 내 거점대학 및 NGO와 협력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ODA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

(1) 공정무역과 ODA

현재 농업 ODA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농업 생산성 증가를 통한 저개발국가의 소득증대사업은 한국이 가진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기술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전 방식은 농업생산성 향상 외에 친환경농법이나 토종종자 보호와 같은 새로운 의제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ODA의 목표가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단의 공정무역 사례는 환경적인 상품을 구매하면서도 생산자가 이에 대한 값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충남의 농업기반 사회자원들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친환경적 농업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ODA 사업으로 진행하고, 개도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충청남도의 ODA 사업 주체나 지원기관을 통해 판매하여 이 수익금을 다시 ODA 사업 자금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ODA와 공정무역을 통한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농업-‘공정무역과 같은 특성화된 개발협력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수 있으며, 더불어 현재 미약한 충남의 공정무역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과 ODA

ODA 사업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단기간의 파편화된 지원 사업 또한 빈곤탈출 및 행복 증진을 위한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력대상국의 지역 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ODA 사업 형태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로 적정기술이나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해왔다. KOICA에서는 혁신적 민관협력사업과 기업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국제개발협력을 지원한다. 혁신적 민관협력사업은 민관협력네트워크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연계 사업으로 KOICA와 민간이 사업 발굴과 기획을 공동 수행하는데, 국내 개발 NGO인 굿네이버스가 몽골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 굿쉐어링이 주요 사례이다. 2015년부터 기존 글로벌사회공헌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시행되는 기업협력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 일반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다(허그림, 2015).

충청남도는 2010년 이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조례, 계획수립, 행정조직 구성 등)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의 공공 및 민간조직들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경제 역량을 바탕으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및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문화관광 지원

현재 충남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부도 갯벌, 기지시 줄다리기가 각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는 이러한 유산들이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유산임을 뜻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전되고 공유될 유산들이 있지만 등재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충남의 세계유산 등재 경험을 살려 협력대상국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ODA를 구상해볼 수 있다. 이미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는 세계유산을 보호함으로써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생태·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경험을 살려 최빈국 및 개도국의 생태·문화관광 ODA를 추진할 수 있다.

3)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은 국내 에너지 공급기지이자 에너지 다소비 지역으로서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단체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무원 및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호협력 지자체 중 UN 지정 최빈국이자 기후변화 취약국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최빈국 및 개도국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단으로 한 ODA 사업은 환경파괴, 건강피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ODA 사업이 야기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ODA 사업을 지원받는 협력대상국에서 사업신청 시 공여국에 제출하게 되는데, 최빈국 및 개도국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함께 국내에서 현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감독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ODA 사업이 환경파괴와 강제 이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온 일본의 경우 2003년 ODA 현장을 고쳐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 바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4대강살리기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 우라늄광산개발, 해상풍력발전 개발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미약할 때 진행된 사업들(광산개발, 화력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 하굿둑 건설 등)이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갈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난개발을 사전에 제어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논

의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개발현장을 사례로 한 환경영향평가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교류·우호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 처럼 과거의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재평가하고 되돌리려는 사업의 사례를 통해 개발협력국에서 ODA 사업의 사후관리 및 보다 지속가능한 ODA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부록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표 4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사회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및 개선된 영양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리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목표 5	젠더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부여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목표 7	모두를 위한 값싸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경제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목표 9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촉진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환경	목표 13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한 실천 실행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응, 토지황폐화 중지 및 역전,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이행수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의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목표 17	이행수단의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자료: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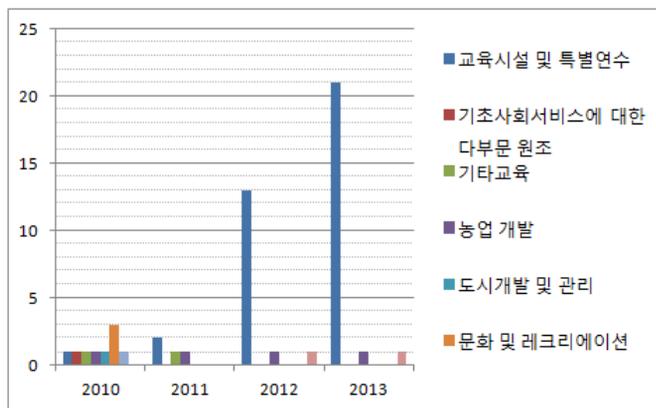
* 사회, 경제, 환경, 이행수단의 구분은 연구자의 임의 구분임

부록 2. 국내 시·도별 ODA 현황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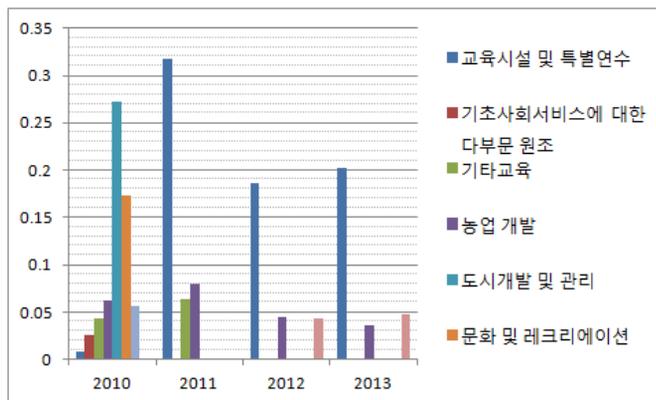
1) 강원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도의 ODA는 총 51건, 166.3만\$이었다. 사업 분야는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가 사업수와 약정액에서 가장 많았다. 2011년 이후 ㉠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 ㉡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사업, ㉢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1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강원



<그림 1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강원



15) 시·도별 ODA 현황은 EDCF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수출입은행, 2015, 기관별 ODA 제출현황, 국회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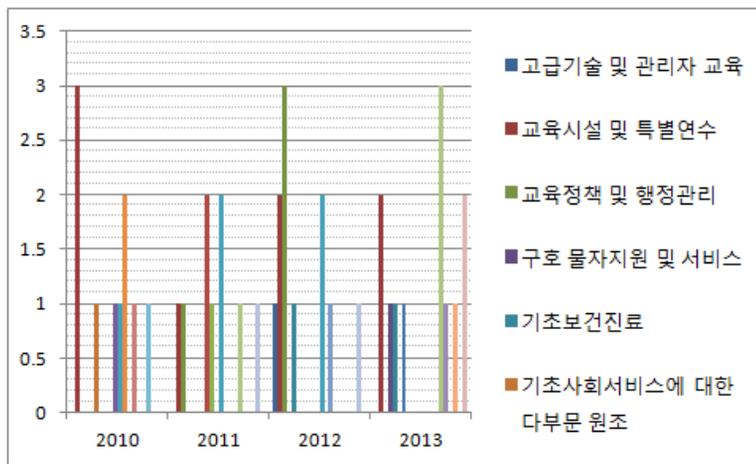
[표 44] 210~2013 강원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51건, 166.3만\$

	사업명	약정액 (\$)	비고
2010	중국 길림성 연변 자치주 청년연합회 교류사업 지원	8,655	학습기자재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도비)	272,436	-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분담금)	56,257	-
	EATOF 회원국 캄보디아 씨엠립주 불용소방차 무상지원	25,965	-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사업	43,275	-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운영	62,200	농자재 지원 및 농업전문가 파견
	아프리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3건)	173,100	-
2011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 (2건)	317,51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사업	63,216	-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79,472	-
2012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운영	44,408	-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 (13건)	186,223	-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사업	43,330	-
2013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운영	36,543	-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사업	48,254	-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 국제훈련 (20건)	202,1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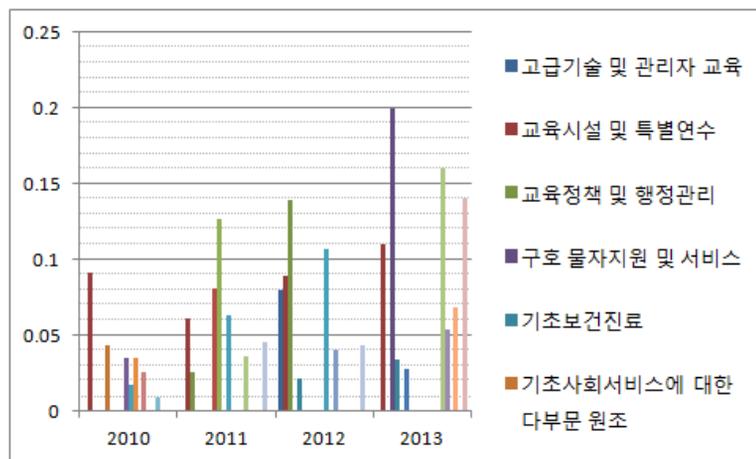
2) 경기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ODA는 총 42건, 200.8만\$이었다. 사업분야는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분야가 8건, 35.1만\$로 가장 많았고, ‘성평등’이 주요(1차적) 목적인 사업이 3건, 부차적(2차적) 목적인 사업이 4건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같은 기간 전체 ODA 중 ‘성평등’이 주요(1차적) 목적인 사업은 7개 기관, 722건이었고,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했다. 또한, 태양에너지(14.1만\$) 사업이 눈에 띈다.

<그림 2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기



<그림 2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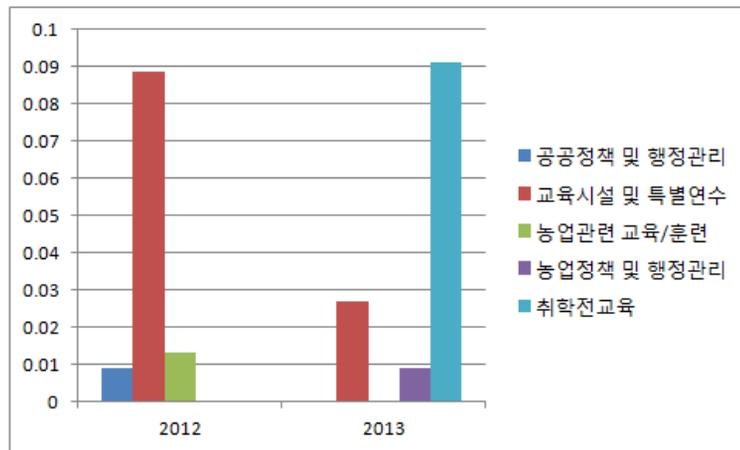
[표 45] 2010~2013 경기도 ODA 사업 세부 내역_ 42건, 200.8만\$

	사업명	약정액(\$)
2010	경기도 농업 시범지역 개발사업	34,620
	고려인 아동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3,275
	베트남 농촌지역 주민 희망도서관 구축	21,637
	베트남 농촌개발 지원사업	25,965
	몽골 국립과기대 자동차정비 기술교육 및 시설지원 사업	43,275
	탄자니아 농업전문가(공무원) 초청연수 사업	8,655
	몽골 공무원 등 여성정책 심화형 연수사업	25,965
	고려인청소년 IT장비 지원사업	8,655
	캄보디아 농업전문인 양성 초청연수사업	17,310
2011	라오스 청소년센터 교육지원사업	25,965
	필리핀 실랑지역 리잘병원 의료설비 지원 및 컨설팅 프로젝트	36,123
	캄보디아 바탐방지역 초등학교 교실 재건축 지원사업	45,154
	필리핀 관개용수 및 가정용 식수시설 건립사업	36,123
	세종한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도서관 및 IT교실 건립	61,410
	러시아 연해주 유기농콩 가공공장 설립지원	126,433
	몽골 울란바타르 근교 식수개선 우물지원사업	45,154
	인도네시아 여성공무원대상 e-Biz 방문교육	25,286
2012	캄보디아 캄푹주 농업소득개발 시범사업	31,608
	파라과이 알도빠라나주 농업기술 지원사업	31,608
	e-learning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IT 장비 구축사업	79,936
	라오스 소수부족 아동들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 사업	43,520
	짐바브웨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희망미래센터 건립	44,408
	캄보디아 캄푹주 농업소득개발 시범사업	26,645
	인도네시아 여성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현장체험 연수	35,527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연수 및 새마을도서관 건립사업	71,054
	러시아 연해주 유기농콩 가공공장 설립지원	79,936
	몽골 헬라스트 희망도서관 건립사업	39,968
2013	필리핀 세부 탈리사이 빈곤층 주민 및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21,316
	키르기스스탄 컴퓨터&어학교실 건립	44,408
	한-우즈벡 수교 20주년 기념 'Korean Dream 142&19학교 한국어센터' 개설	32,862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복구 지원금	200,000
	온두라스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 및 학습형 마을리더 양성사업	91,357
	미얀마 아에야르와디구 마우빈지역 개발센터 건립	45,678
	캄보디아 캄푹주 쓰띠알마을 병원 운영지원 및 의료진 역량강화사업	38,370
	인도네시아 '올라이트 빌리지 조성 프로젝트'	49,333
	베트남 빈곤아동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7,407
	네팔 응급 및 취약진료분야 의료장비 지원	33,802
	응에안성 빈곤여성 쉼터 건립 및 역량강화	63,950
	미얀마 양곤시 짜웃단구 요앗땃찌 고등학교 건립사업	68,518
	에티오피아 아다마과학기술대학교 교육인프라 개선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	53,900
몽골 다르항 절단장애인 의수족지원	55,728	
베트남 연쩍현 주민건강 증진사업	65,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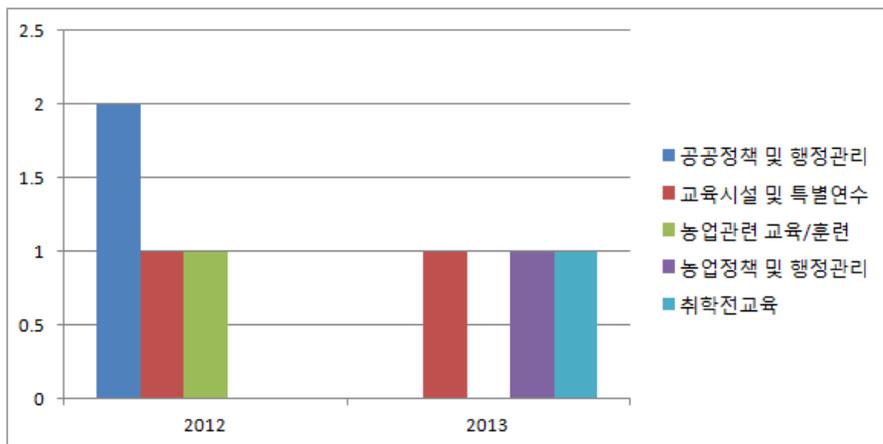
3) 경상남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상남도의 ODA는 총 7건, 23.8만\$이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은 2012년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 2건, 8,880달러에 불과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캄보디아에 ‘창원국제 교류협력센터 건립사업’ 등 3건, 20.7만\$과 함안군이 몽골에 ‘시설원예농업 현지지도 교육’ 등 2건, 2.3만\$이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규모와 사업수는 적지만, 기초지자체의 ODA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남



<그림 23>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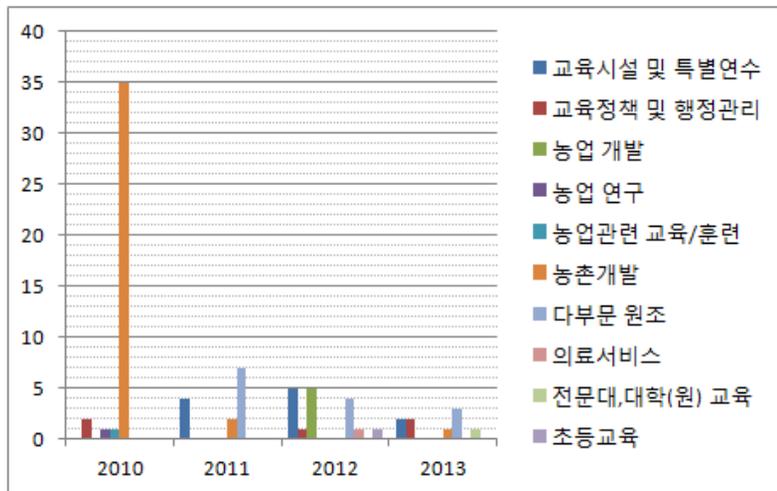
[표 46] 2010~2013 경상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7건, 23.8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2	시설원에농업 현지지도 교육(함안)	13,322	몽골
2012	창원국제교류협력센터 건립사업(창원)	88,817	캄보디아, 다목적 복합건축물 신축
2012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초청 연수	4,440	베트남
2012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초청 연수	4,440	인도네시아
2013	몽골 울란바토르시 향울구 농업연수단 초청(함안)	9,135	
2013	5천원의 기적 어린이 돕기 (창원)	26,751	캄보디아, 트로페양 마을도서관 건립
2013	캄보디아 (창원)	91,357	다목적 복합건축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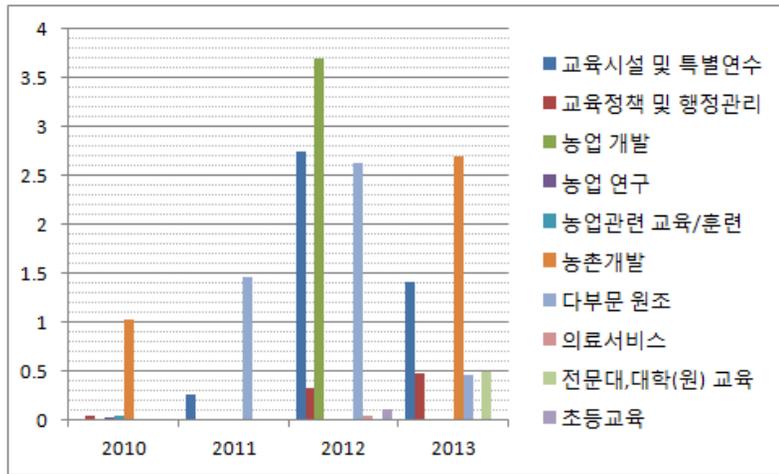
4) 경상북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상북도의 ODA는 총 78건, 1,793.6만\$이었다. 사업 분야는 ‘농촌개발’ 사업이 38건(373.6만\$)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다부문 원조’가 455.5만\$,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사업이 439.9만\$로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이 59건, 1,333.4만\$로 전체 사업수 대비 75.6%, 금액 대비 74.3%를 차지했다.

<그림 2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경북



<그림 2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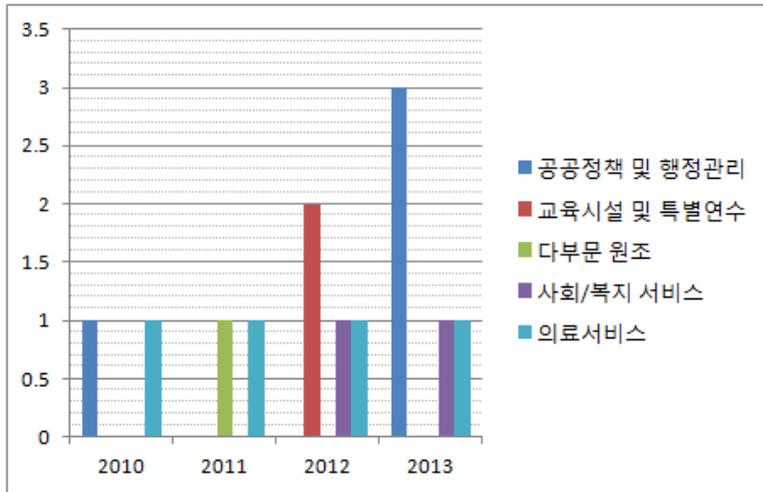
[표 47] 2010~2013 경상북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78건, 1,793.6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외국공무원 한국어 연수(2건)	40,677	-
	운남성과 농업과학 기술교류	33,321	-
	몽골 농업관계자 경북농업기술연수	43,275	-
	동남아지도자초청 새마을교육(4건)	34,620	새마을운동의 경험, 성공사례 소개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 연수(17건)	17,306	새마을 우수현장 방문 및 교육
	외국인 지도자 초청 교육(6건)	247,963	새마을운동의 경험, 성공사례 소개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3건)	173,100	-
	새마을리더봉사단 파견(3건)	562,574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 등
2011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2건)	-	농업, 환경, 교육, 의료기술 및 인프라구축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2건)	-	-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단(3건)	171,586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과 연계하여 도내 대학생 외봉사단 파견으로 새마을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향상
	새마을해외리더봉사단(4건)	1288,718	-
2012	외국인지도자 새마을연수(4건)	255,574	-
	마다가스카르 농촌개발시범사업	35,527	벼 시범마을 및 새마을운동 확산
	초등학교 리모델링	106,581	-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35,527	포항 메디컬센터 건립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농수로 설치	26,645	-
	새마을 전문학위 과정	1332,267	-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2건)	2309,263	-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2건)	2664,534	-
	개발도상국 농업인 경북 선진농업 연수(2건)	53,290	-
	한국형밀레니엄빌리지사업(2건)	150,000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한 통합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아프리카 빈곤퇴치
	몽골 울란바타르시 공무원 도시개발분야 초청연수	21,476	-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단	177,635	-
	외국인지도자 새마을연수	319,744	-
	새마을해외리더봉사단	2309,263	-
2013	새마을운동국제화사업	54,814	-
	새마을국제교육	54,814	-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1370,363	-
	새마을해외리더봉사단	210,000	-
	외국인지도자 새마을연수	419,000	-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단	193,000	-
	몽골 울란바타르시 공무원 도시개발분야 초청연수	34,034	-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2700,000	-
	새마을전문학위과정	489,8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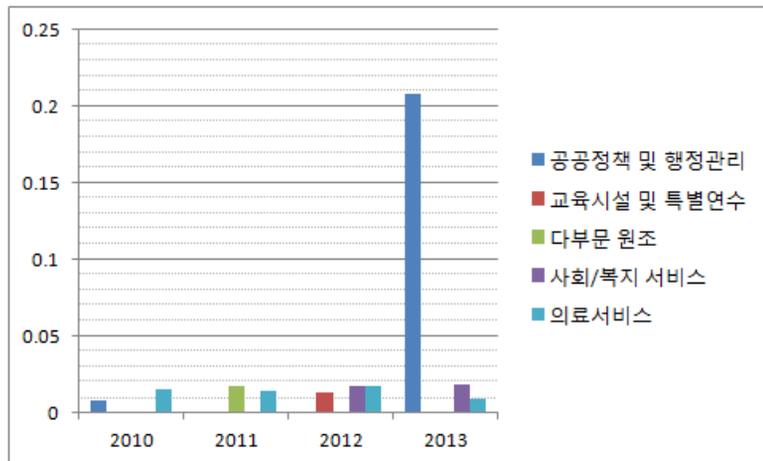
5) 대구광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의 ODA는 총 14건, 33.8만\$이었다. 사업분야는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가 4건, 21.6만\$로 가장 많았다.

<그림 26>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대구



<그림 27 >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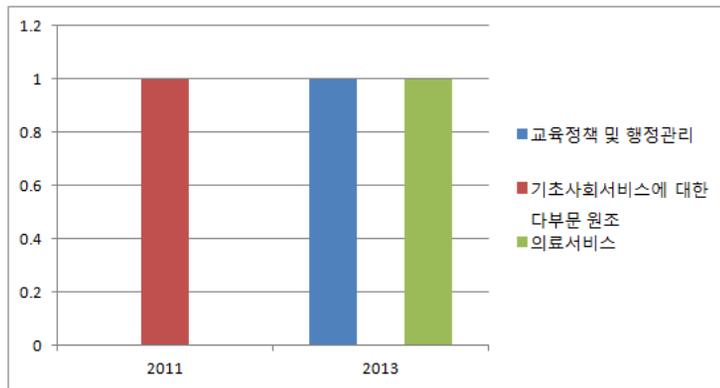
[표 48] 2010~2013 대구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14건, 33.8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대구시 의료봉사단 카자흐스탄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15,579	대구의 자매도시
	k2h프로그램 참가(개도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행정 연수 프로그램)	8,222	-
2011	대구시 의료봉사단 카자흐스탄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13,727	-
	2011국제기능봉사	17,158	베트남 다낭시, 이·미용, 시계수리, 의류수선, 창호(방충망)수리 등
2012	2012 국제기능봉사	16,875	-
	대구시 의료봉사단 카자흐스탄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17,763	-
	k2h프로그램 (개도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행정 연수 프로그램)	6,548	-
	k2h프로그램 (개도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행정 연수 프로그램)	6,548	-
2013	대구시 의료봉사단 카자흐스탄 자매도시 알마티(Almaty)시 의료 봉사	9,135	-
	2013 국제기능봉사	18,271	-
	K2H 프로그램	6,851	-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182,715	르완다외 7개국 13명
	새마을 세계화사업	18,271	미얀마 탄린 협동대학교, 현지 새마을동아리 조직 운영지원금 전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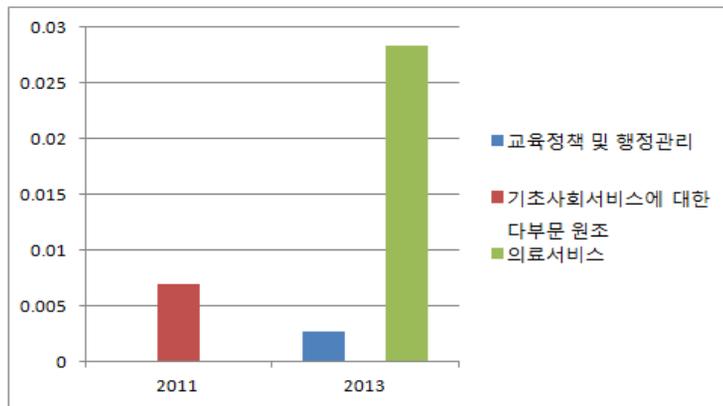
6) 대전광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의 ODA는 총 3건, 3.8만\$이었다.

<그림 2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대전



<그림 2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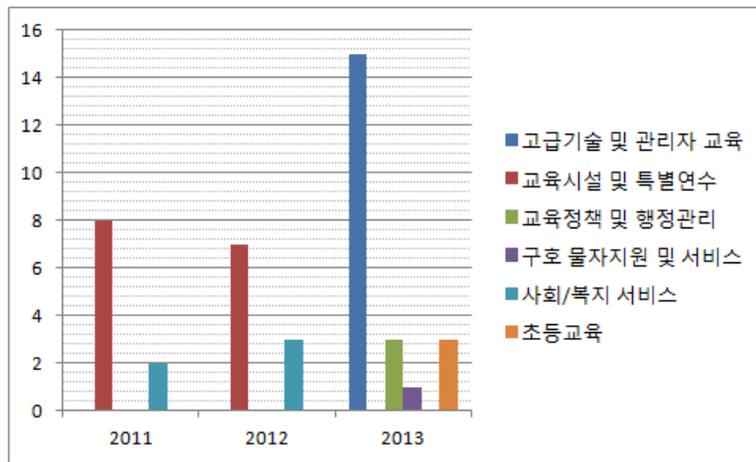
[표 49] 2010~2013 대전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3건, 3.8만\$

연도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1	캄보디아 교류협력 증진	6,899	소방차 1대
2013	몽골 협스걸 공무원 초청 행사	2,740	공무원 초청연수
2013	몽골 협스걸의료봉사단파견으로 의료분야 교류	28,320	의료봉사단 협스걸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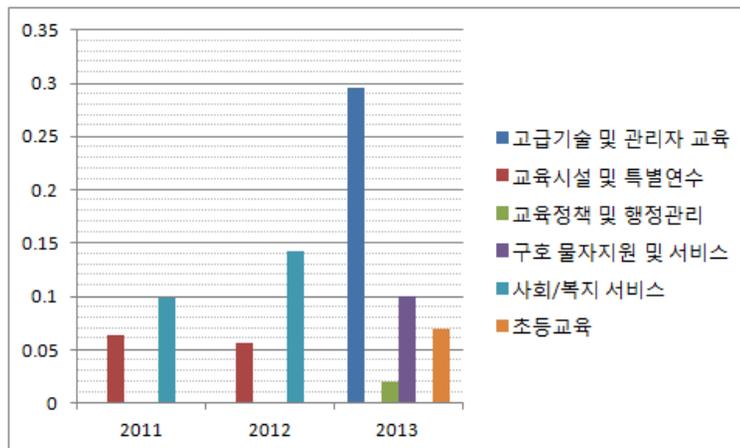
7) 부산광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의 ODA는 총 42건, 84.6만\$이었다. 사업분야는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과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가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호치민과의 초청연수·의료/문화봉사·소방차량 양여·한글학교 지원 등의 국제협력이 두드러졌다. 그 외 필리핀 타클로반시 태풍피해 구호 긴급 지원이 눈에 띈다.

<그림 3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부산



<그림 3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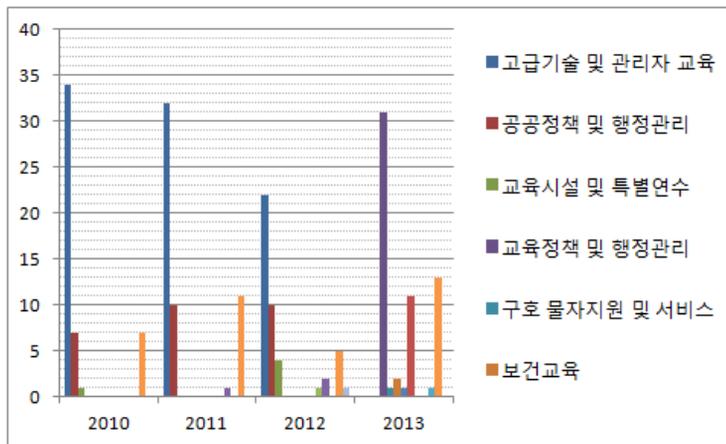
[표 50] 2010~2013 부산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42건, 84.6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1	소방차량 양여 및 기술교류 협약	63,216	-
	개도국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연수(5건)	36,121	자매도시 항만정책 관계자 초청 연수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의료 및 문화 봉사단 파견	36,123	캄보디아, 의약품 및 진료/수술 제공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9,121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자매도시 한글학교 지원(2건)	1,806	인니 수라바야, 캄보디아 프놈펜
2012	국제 환경기술 연수 프로그램	7,151	-
	부산-호치민 소방차량 양여 및 기술교류 협약	79,936	대상차량 6대(펌프 3, 탱크 3)
	개도국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연수(4건)	33,655	-
	개도국 자매도시 의료 및 문화 봉사단 파견(2건)	62,134	-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6,401	-
	자매도시 한글학교 지원	9,769	-
2013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연수(3건)	19,249	-
	APEC 이러닝연수센터 운영 지원(10건)	228,390	APEC 이러닝연수센터 운영 지원
	필리핀 타클로반시 태풍피해 지원	100,000	피해 구호 긴급 지원
	개도국 자매도시 의료 및 문화봉사단 파견(2건)	63,950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호치민
	개도국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연수(5건)	67,430	상하수도/국제협력 분야 공무원 초청 정책연수
	자매도시 한글학교 지원	5,502	캄보디아 프놈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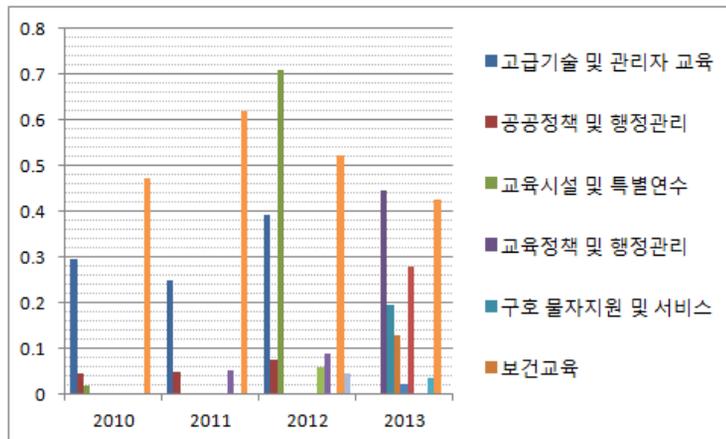
8) 서울특별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ODA는 총 208건, 522.3만\$이었다. 사업분야는 ‘전문대,대학(원) 교육’이 36건, 203.7만\$,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이 88건, 93.6만\$로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서울시가 우수시정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교통, 전자정부, 환경 등 교육·연수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많았다.

<그림 32>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서울



<그림 33>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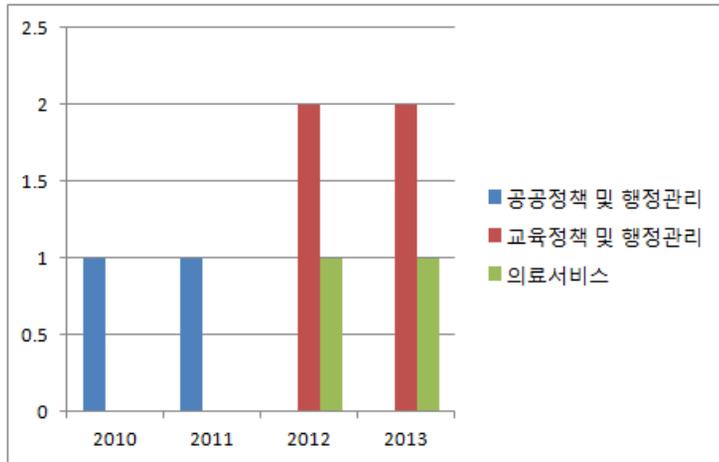
[표 51] 2010~2013 서울특별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208건, 522.3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몽골 국립대학생 초청 서울 연수(8건)	65,355	-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34건)	294,270	전자정부, 환경, 교통, 문화, 디자인 등 관련분야 공무원을 초청 연수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7건)	471,212	-
2011	몽골 울란바토르시 보건의료지원 사업	51,491	-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 연수(10건)	48,160	-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32건)	249,760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11건)	617,859	-
2012	개발도상국청소년센터 교육지원(4건)	710,540	서울시 청소년정책 및 우수프로그램 교육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5건)	522,220	-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2건)	88,816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10건)	74,890	-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 운영(22건)	392,062	-
	동아프리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44,408	동아프리카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상수도 국제지원 사업	60,138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 운영기술 지원 및 기술연수
2013	네팔 해외자원봉사 활동	274	급식봉사 및 한국어 교육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13건)	425,643	-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24건)	301,993	-
	개발도상국 청소년센터 교육지원사업	73,086	-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5건)	71,255	-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21,012	도서 및 행사물품 지원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2건)	129,726	-
	상수도 국제지원(초청연수)(10건)	73,925	상수도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상수도 국제지원(시설개선)	204,262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몽골 바양노르 슴 국제환경자원봉사(조림사업)	34,715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	195,9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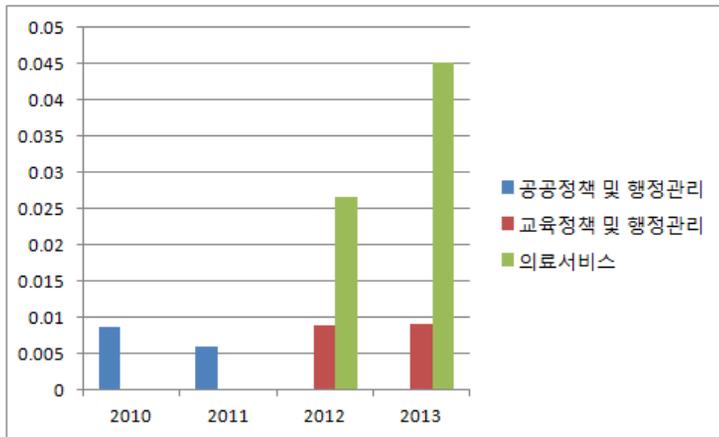
9) 울산광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울산의 ODA는 총 8건, 10.5만\$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과 ‘자매우호도시 의료봉사단 파견사업’이었다.

<그림 3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울산



<그림 3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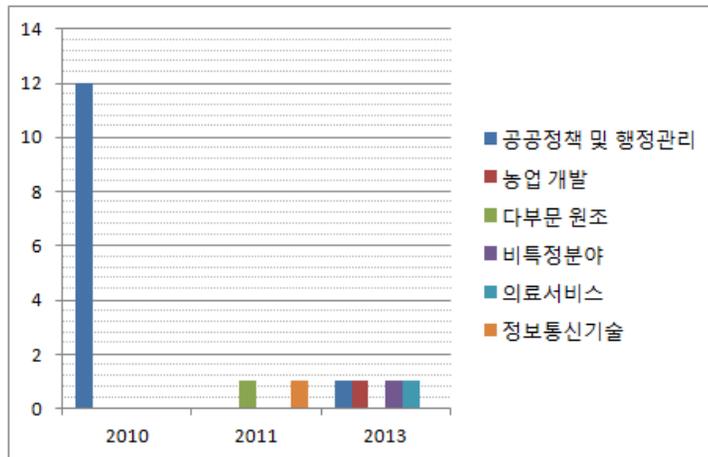
[표 52] 2010~2013 울산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8건, 10.5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8,655	우리시의 선진 정책 소개와 교류
2011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6,050	-
2012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2건)	888	시도지사협의회 추진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의료봉사단 파견	26,645	개도국 자매도시 의료봉사단 파견
2013	자매우호도시 의료봉사단 파견	45,221	의료봉사단 파견 진료 및 위생교육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사업(2건)	9,1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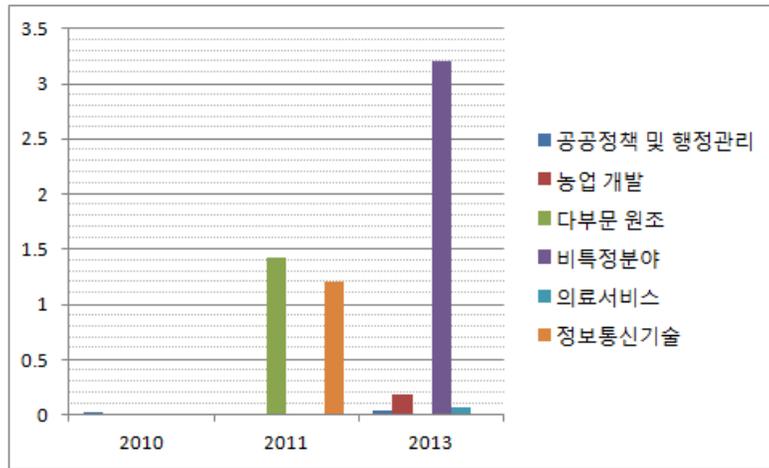
10) 인천광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의 ODA는 총 18건, 616.1만\$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유엔기구 운영지원이 3건, 583.5만\$로 전체 금액의 94.7%에 달했다.

<그림 36>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인천



<그림 37>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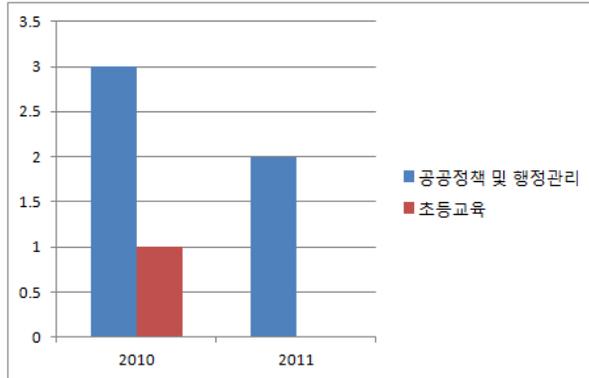
[표 53] 2010~2013 인천광역시 ODA 사업 세부 내역 _ 18건, 616.1만\$

연도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연수(12건)	30,000	인천시찰 및 시정연수, 전통문화 체험
2011	유엔기구 운영지원(UN APCICT)	1.200000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원 운영지원
	유엔기구 운영지원(UN ESCAP SRO)	1.426000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운영지원
2013	UN기구 운영	3.208477	-
	인천 희망의 숲 조성	182,711	몽골 지역 사막화 방지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	39,923	아시아권 자매우호도시 및 신규교류도시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74,086	민관합동 의료지원단 방문

11) 전라남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남도의 ODA는 총 6건, 3.7만\$이었다.

<그림 38>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전남



<그림 39>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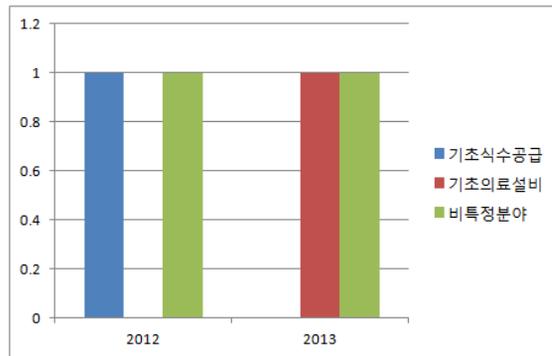
[표 54] 2010~2013 전라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6건, 3.7만\$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개도국에 대한 물자 지원(중고컴퓨터)	7,325	중고 컴퓨터 수리 후 로사리오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20세트 무상지원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상호교류	1,639	-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상호교류(초청)	6,396	-
	외국지방 정부와의 공무원 상호교류	7,936	-
2011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K2H)	3,251	-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상호교류	9,9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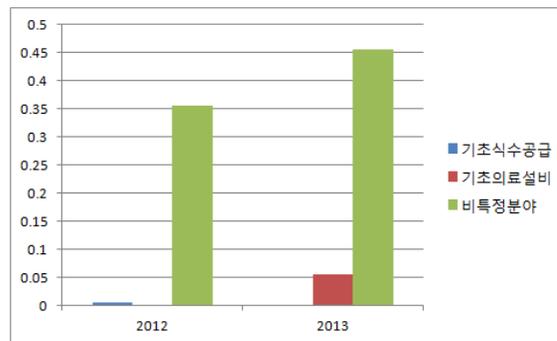
12)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의 ODA는 총 4건, 87.1만\$이었다. 대부분은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경비 출연금으로 전체금액의 93.2%에 달했다.

<그림 40>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제주



<그림 41>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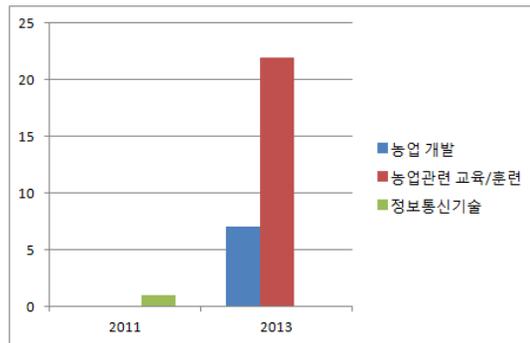
[표 55] 2010~2013 전라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4건, 87.1만\$

연도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2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 출연금	355,271	매년 운영경비(4억원)를 출연
	지하수 이용시설 개발지원	4,440	캄보디아 식수난지역에 지하수개발 지원
2013	유니타르 국제훈련센터 출연금	456,787	-
	동티모르 딜리국립병원에 의료기구 지원	54,814	동티모르 딜리국립병원에 8종의 의료기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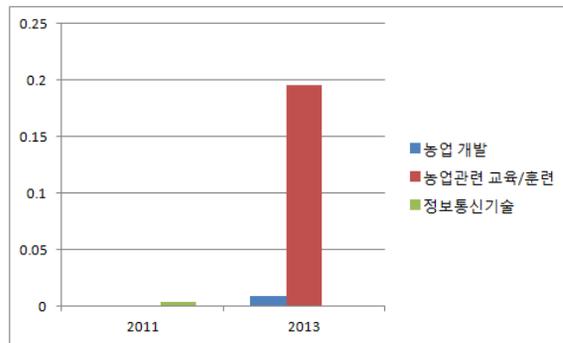
13) 충청남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충청남도의 ODA는 총 30건, 20.8만\$이었다.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저개발국가에 농업기술과 벼 관련 생산기술 전수 사업이었다.

<그림 42>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충남



<그림 43>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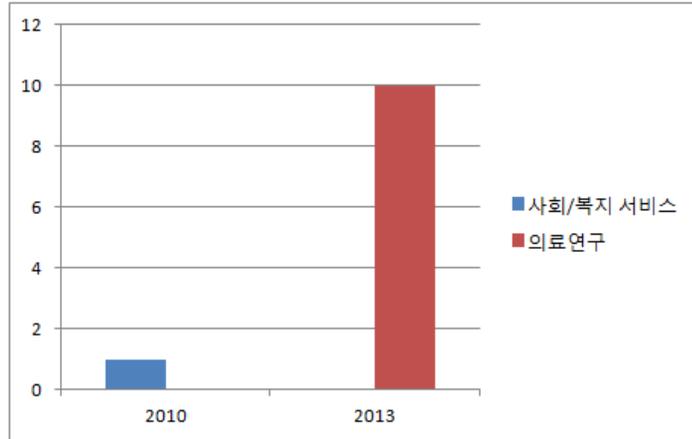
[표 56] 2010~2013 충청남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30건, 20.8만\$

연도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1	저개발국 정보화 지원 사업	4,220	캄보디아 씨엠립 주의 정보화 능력 향상, 중고PC 100대 무상기증
2013	아프리카 농업개발과정(22건)	199,408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이론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전수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7건)	8,574	벼 관련 생산기술(육종, 재배기술, 병해충, 시비,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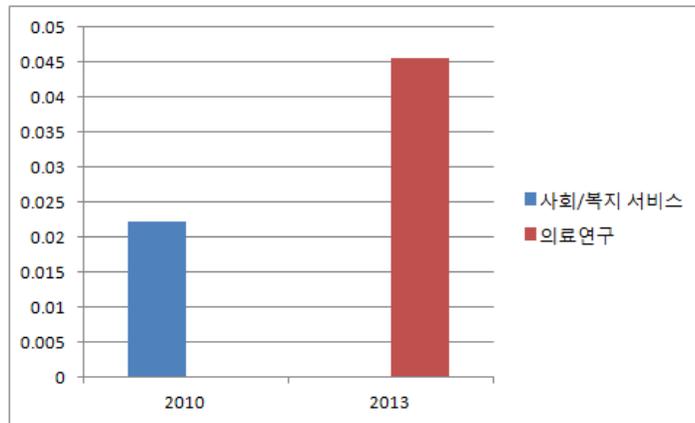
14) 충청북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충청남도의 ODA는 총 11건, 6.8만\$이었다.

<그림 44> 사업 분야별 사업 수 _ 충북



<그림 45> 사업 분야별 약정액 _ 충북



[표 57] 2010~2013 충청북도 ODA 사업 세부 내역 _ 11건, 6.8만\$

연도	사업명	약정액(\$)	비고
2010	필리핀 벵갯주 소방장비 지원	22329	소방장비 기증 및 운송 지원
2013	지역 바이오 소재 부가가치 창출과정(10건)	45562	저개발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바이오소재 개발 교육(바이오 의약)

부록 3. 국외 지자체 ODA 체계¹⁶⁾

1) 프랑스

프랑스는 26개 지역(regions), 100개 departments, 342개 districts, 183개 metropolitan areas, 36,782개 municipalities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분산화를 시작하여 지방정부가 큰 자율성을 갖는다. 헌법 72조는 지역을 영토적 단위로 인정하고, 재정적 자율성 원칙(principle of financial autonomy)을 확립하고,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인정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전(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GCT)은 프랑스 지방정부의 국제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법전의 5장에서 분산화된 협력을 규정한다. 프랑스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파트너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분산화된 협력을 위한 국가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NCD)는 분산화된 협력 활동의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몇몇 지역들은 개발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 Regional institut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lsace Region,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by Centro Region 등의 자체 기구를 만들었다.

재정과 관련하여 분산화된 협력 활동에서 외국의 개별 법적 기관은 개별 분산화된 협력 활동 비용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관련 공공기관들은 예산의 1%까지만 분산화된 협력에 사용할 수 있다는 Oudin-Santini law가 2006년 만들어졌다.

16) 유럽 사례는 다음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Copsey, Nathaniel and Carolyn Rowe, 2012, Study on the Competencies, Financing and Actions Undertaken by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일본 사례는 다음 문헌을 참고해 정리하였다. Takao, Tasuo, 2014, "Local Levels of Participation in Japan's Foreign Aid and Cooperation: Issues Arising from 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urvey, 54(3), 540-564.

2) 스페인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Autonomous Communities), 2개의 자치시(Autonomous Towns)로 구성되며, 17개의 자치지방은 50개의 주(provinces)와 8108개의 시군(municipalities)으로 나뉜다. 스페인은 매우 분권화되어 있어 주는 자체 입법권을 지니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갈리시아(Galicia), 안달루시아(Andalusia), 바스크(Basque Country), 카탈루냐(Catalonia) 주는 다른 주와 자치권한이 상이하다.

분산화된 개발 협력은 스페인 개발협력의 주된 특징이다. 분산화된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 틀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스페인 헌법 149조는 국제관계를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1998년 개발협력에 관한 법은 지방 정부에 개발협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법 2조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을 개발협력정책의 주된 수여자로 삼을 것, 인권과 기본적 자유, 차별금지, 평화, 민주주의, 시민참여를 존중할 것, 세계 인간 개발을 촉진할 것, 재분배 정책 및 복지에 대한 접근과 함께 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약속을 존중할 것 등이다.

몇몇 자치지방(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나바라, 아라곤, 갈리시아 등)은 자신들의 국제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모두 개발 협력 내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들이 함께 만든 국제협력 펀드의 역할도 인지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만든 펀드는 전체 분산화된 ODA 중 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치지방은 저마다의 개발협력기구를 만들었으며, 지방정부들은 개발협력정책(종합계획 등)을 만들고 있다. 지방정부는 Inter-territorial Commiss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에 참여하여 개발협력 계획이나 전략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 외에 지방 정부의 개발협력력을 조정하는 국가 시스템은 없다. 사실, 스페인에서 지출되는 분산화된 협력의 3분의 2는 자치지방에서 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시군 자체에서 온다. 지방정부들은 MUNICIPIA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화된 협력 활동에 집합적으로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군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조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각 자치지방은 저마다의 개발협력 기구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카탈루냐 개발협력기구(ACCD)는 6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이 110백만달러를 넘는다. 카탈루냐 개발 기금의 55%는 NGO를 통한다. 20~35%는 직접 양자간 협력, 10~25%는 다른 양자간 협력을 통해 지출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런 분산화된 개발협력 틀을 조정하고 계획하기 위해, 스페인 개발협력법(1998년 제정)과 개발협력종합계획(2009-2012)에서 지방 및 지역 수준의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간 조정 및 대화를 위해 Inter-Territorial Commiss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과 Consustative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설립했다. 현재 스페인 양자간 ODA의 20%를 지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은 세 단계의 정부 구조를 갖는다. 지방 수준에서 290개의 시군과 21개의 주가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 활동에 대한 법은 없다.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국가의 책임에 있는 일들을 지방정부가 다룰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UN Habitat Survey 2007에 따르면 4분의 1 이상의 지방정부들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와 파트너십을 맺는 형태로 국제개발협력에 개입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스웨덴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예산으로 스페인 정부의 ODA를 받는 국가들에게 현물, 자문,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지방정부들이 ODA에 참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예산으로 특정 형태의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 지방자치연합(SALAR)은 ODA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wedFund international AB와 SALAR이 소유한 SKL international도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민주적 지역사회 계획이나 행정을 지원한다.

스웨덴의 ODA의 상당부분은 UN, 개발은행, 글로벌 기금 등의 다자간 기구를 통해 집행된다. 시민사회조직(CSOs)도 2007년 기준 총 ODA 지출의 25%를 담당한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들은 개발협력 영역에서 NGO들과 거의 협력하지 않는다. 많은 시군은 개도국의 파트너 지방정부와 개발협력 협정을 맺고 분명한 목표로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군 협력 기금에 대한 신청은 일년에 세번 진행되며, SALAR, SALA IDA/SKL, ICLD 등의 검토를 거쳐, SIDA가 파트너 국가에 있는 외교관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4) 독일

독일은 연방정부로 주(länder)가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다. 지방 정부는 두 계층 체계로 기초지자체(시군)와 광역지자체(주)로 구성되며, 16개의 자치 Länder, 323개의

district, 14,865개의 municipality가 있다. 외교 관련 법이 국제 개발 정책을 포함한다. 지방정부가 국제개발협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다.

독일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양자간 ODA 규모가 큰 국가이지만, 개도국 지방정부 및 도시와의 개발협력의 규모는 매우 작다. 유럽 내 도시들과의 협력은 큰 편이지만,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1960년 대에, 연방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을 책임지지만 주정부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 정부가 개발협력을 위한 연방-주 협의회를 통해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개발 활동에 점차 참여하게 된다. 주정부는 개발협력청(GIZ)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분산화된 협력은 연방 차원의 협력에 끼워 맞춰진다. 예를 들어, 독일국제협력재단(DSE)은 개도국의 전문가와 고위공무원을 위한 정책 대화 및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 연방정부 및 일부 연방주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DSE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의 경제협력및 개발국(BMZ)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한편 주정부는 주로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분산화된 협력 형태 ODA 예산의 90%를 차지한다. 기초자치체는 자체 예산으로 자매도시(twinning)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은 분산화된 개발 협력을 위한 국가 수준 또는 주 연합 수준의 재정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주로 자선단체나 교회 등에 의한 기부, 후원, 직접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5) 영국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네 지역국가로 구성된다. 1998년 블레어 정부는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 웨일즈정부법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북아일랜드법(Northern Ireland Act 1998)을 제정하고 자치권 이양을 추진하여 준연방주의적 국가체제로 전환하였다. 지역국가별 권한에 차별을 두었는데,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는 각각 별도 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웨일즈는 집행권과 부수적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반면, 잉글랜드는 영국의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경기도 의회, 2013).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는 광범위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지방자치단체(Principal Authorities)인 County, Unitary Authority, Borough, District 등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능을 제한

적으로 수행하는 주민들의 자생적 자치조직의 성격이 강한 준지방자치단체(Sub-Principal Authorities)인 Parish, Town, Community 등이 있다. 영국의 지방 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는 25% 정도에 그친다(경기도 의회, 2013).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영국의 ODA를 책임지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가 자신들의 정책과 전략을 지니고 있다. 지방 수준에서 지방정부들은 UCLG, CLGF, ICLEI 등의 파트너십 연합들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방정부들이 개발협력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핵심 법은 지방정부해외지원법(Local Government Overseas Assistance Act, 1993)이다.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적용되지만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지방정부들이 그들이 기술과 경험을 가진 문제에 관해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정책 이슈들에 대한 관계들을 규제하는 연성법(Soft Law) 틀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상호 이해와 정보 교환이라는 맥락 하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국제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런 틀 속에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가장 광범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영국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개입의 재정적 측면을 통제하는 법적 틀은 없다. 대신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경우 모든 지출은 지방정부 재정 규제를 지켜야 하며, 모든 활동들은 영국 내 지방 공동체에 분명한 편익을 주어야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0-2011년과 2011-2012년 지역 국제개발 예산을 9백만 파운드(GBP)로 유지하고 있다. 이 예산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국제개발정책(의 지리적, 부문별 우선순위)에 일치하는 몇몇 사업에 직접 지원된다. 스코틀랜드 국제개발기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지출된다. 첫번째는 Challenge Fund Model로 모든 조직이 미리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는 Targeted Competitive Tendering으로 개도국과 함께 설정한 특별한 작업 수요에 대해 관련된 전문 조직 4~5개에게 입찰하도록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는 Block Grant Funding으로 전략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나 컨소시엄에게 보조금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조직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금을 분배하는 틀은 EU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웨일즈의 ODA는 아프리카 남부 레소토(Lesotho)의 파트너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웨일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모토는 "아프리카를 위한 웨일즈(Wales for Africa)"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고 있다. 2010~2011년에 270,000파운드(GBP)가 웨일즈 주민들과 아프리카 공동체 사이의

연계를 만들려하는 조직에 수여되었다. 웨일즈 정부는 NG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잠비아, 레소토, 카메룬, 우간다 등에서 공공부문 관리자들이 8주 동안 머물면서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학습기회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비슷하게 북아일랜드는 우간다를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말라위를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정부해외지원법(1993)에 따라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는 자체 국제개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LGA의 국제협력전략의 주요 목적은 서비스 전달 증진 방법을 소개하고 전문성 및 리더십 개발 방법을 교환함으로써 전세계의 지방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것이다.

6) 일본

1997년과 1998년에 경제협력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Cooperation)은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지자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999년에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참여 모형(community participation model)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일본 원조 기관들, 특히 외무성과 총무성이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산화된 국제협력(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두 부처는 지방정부가 국제 협력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하향식 지침과 재정지원 방식으로 지방 수준의 참여를 촉진하려 했다.

외무성은 1971년 지자체의 해외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만들었다(2003년 종료). 외무성은 개도국의 전문가를 일본 내에서 훈련시키는 한편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한 OD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재정을 지방정부에 지원했다. 1990년대 후반 외무성의 JICA(일본의 양자간 ODA 중 기술협력의 책임 기관)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 외무성이 주도한 ODA 개혁은 JICA로 하여금 지방정부에 외주를 주는 방식(contracting-out method)으로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JICA의 요청에 맞추도록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기부함으로써 ODA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JICA는 여전히 지방정부에게 설비나 과거 프로젝트 경험 등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자치성(Ministry of Home Affairs)은 국제화 촉진 지출(kokusaika suishin taisakuhi)을 위한 이전 지불(transfer payments)을 지방 할당세(Local Allocation Tax)를 통해 지방정부에 할당하기 시작했다. 이 지불액은 1997년 13억 달러로 최고

조에 올랐다가 이후에는 12억 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일본의 공식적인 ODA 예산으로 집계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유인제도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자신들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지출된 프로젝트 비용은 1994년 7,000만 달러에 달했다가 이후 5,000만달러에서 6,000만 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1988년 자치성은 국제관계를 위한 지방정부 위원회(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LAIR)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이후 CLAIR을 통해 개별 지자체와 현에게 행정 지침을 제공해오고 있다.

< 참고문헌 >

- 강선주, 2014, "Post-2015 개발 어젠다: UN 정부간 협상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2014.9.17.).
- 강원도, 2014, 행정사무감사(글로벌사업단) 내부자료.
- 경기도, 2013, 도정백서.
- 경기도의회, 2013, 국외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 지방자치부 신설을 중심으로.
- 관계부처합동, 2015,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20-1호).
- 관계부처합동, 2015,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20-3호).
- 구윤정, 2015, "OECD DAC의 ODA 재정의와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4(1).
- 국무조정실,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 국무조정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 권율, 2015, "지속가능발전과 개발재원", 녹색ODA센터 발표자료(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워크숍)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20호-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제21-1-5호
- 김중섭 외,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연구원.
- 김태경 외, 2014, 해외개발협력사업의 경기도 참여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태균 외, 2015,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20권 제1호, 135-175쪽.
- 김현주, 남상은, 2014, "Post-2015와 시민사회", Issue Brief 13호.
- 문도운, 2014,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와 Post-2015 개발목표의 내용", 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제12호.
- 박광동 외, 2014,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박찬용, 2012, 경북 새마을운동 ODA사업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3,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
- 손혁상, 2013,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주요 담론",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송두범, 홍원표, 2013,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충남연구원, 2015, 개원 20주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 수출입은행, 2015, 기관별 ODA 제출현황, 국회 제출자료
- 신중호, 2012, ODA(공적개발원조), 지자체가 함께 댈다, 경기개발연구원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환경분야 ODA 사업 유무상 사업 연계 방안 연구.
- 윤성필, 2014, “지방정부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아산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준, 2014, "르완다 동향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르완다 사무소
- 이소영, 2014,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지방자치 Focus 제87호.
- 이소영, 김현호, 2014, 대구광역시 ODA사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태주, 2011, 한국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 원조 방안
- 이학교 외, 2011,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의 재정립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임소진, 2015,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 EDCF 이슈페이퍼 4(8).
- 임한성, 임재강, 201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성과평가,” 국가정책연구 27(4).
- 조한덕, 2013, “국제개발협력과 ODA”,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조현주, 박건운, 정현주, 2015,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지방의 세계화 수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1호 (통권 100호), 261-289.
- 채진원, 김한준, 이은주, 2014,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충남리포트 143호.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14, 2014년도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과정 연수결과 보고서.
- 하현선, 2014,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허그립, 2015, 사회적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연구: 미국, 영국, 스웨덴 지원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4, 개발학 강의, 푸른숲.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환경부, 2013, Post Rio+20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방안 연구.

- Copsey, Nathaniel and Carolyn Rowe, 2012, Study on the Competencies, Financing and Actions Undertaken by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European Union.
- Gobierno De España, 2013, Spanish Cooperation Evaluation Policy
- Higgins, Kate, 2013, Reflecting on the MDGs and Making Sense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SI Research Report.
- Instituto Complutense de Estudios Internacionales, 2010, "Decentralized Development aid in Spain and effectiveness challenge", ICEI Paper.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1, IDS Research Report 65
- Jorge Gutierrez-Goiria, Unai Villena, Eduardo Malagon, 2011, "Rethinking Development in an Age of Scarcity and Uncertainty". 19-22 Sep. 2011, University of York. UK
- OECD, 2005, Aid Extended by Local and State Government, Pre Print of DAC Journal 2005, 6(4).
- OECD, 2013, Aid for CSOs
- Takao, Tasuo, 2014, "Local Levels of Participation in Japan's Foreign Aid and Cooperation: Issues Arising from 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urvey, 54(3), 540-564.
- UCLG, 2011,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Pap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
- UCLG, 2012, Finding synergies for improved local and regional governance.
- UCLG, 2009, UCLG Position Paper on Aid Effectiveness and Local Government: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governance and development.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웹사이트>

독일국제협력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홈페이지 (검색일. 2015.06.14) <http://www.bmz.de/en>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neargov.org/kr/>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 “스페인의 대외 ODA 지원 정책 및 문제점” (검색일. 2015.06.10)
http://es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675&seqno=112934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archives/387>

충청남도 홈페이지(국제교류 · 협력 현황)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1053)

A European Think Thank for Glocal Action (FRIDE) “Decentralized Development Cooperation” (검색일. 2015.06.14)
http://fride.org/uploads/Cooperacion.descentralizada_Backgrounder_EN.pdf

Catalan News Agency, 'The Catalan Government increases aid to the Horn of Africa', 12.October.2011 (검색일. 2015.06.10)
<http://www.catalannewsagency.com/society-science/item/the-catalan-government-increases-aid-to-the-horn-of-africa>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검색일. 2015.06.14)
<http://www.entwicklungspolitik-deutsche-laender.de/en>

Global Nature Fund (검색일. 2015.06.15)
<http://www.globalnature.org/35735/Cooperations/Supporters/SEZ/resindex.aspx>

List of Least Development Countries 2013 (검색일. 2015.06.15)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cdp/lcd/lcd_list.pdf

Wikipedia, Rheinland-Pfalz (검색일. 2015.06.16)
<https://de.wikipedia.org/wiki/Rheinland-Pfalz>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검색일. 2015.06.16)
<http://wfto.com/events/2015-fair-handeln-fair-stuttgart-germany>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강준 에너지정책센터 센터장
 조보영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연구자문 ·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박인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재각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15-18 · 충남 ODA 추진 방향 연구

글쓴이 · 여형범 · 이강준 · 조보영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6월 30일 / 발행 · 2015년 6월 30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76(환경생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89
ISBN · 978-89-6124-309-4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